

## 3기 현장소통소위원회 백서

담당부서 : 경영전략본부 정책혁신부

집필진 : 현장소통소위원회

# 목 차

I. 발간사.....	1
II. 현장소통소위원회 위원 후기.....	2
III. 3기 현장소통소위원회 개요.....	5
IV. 3기 현장소통소위원회 주요 활동.....	13
V. 총평.....	43
VI. 별첨자료.....	45

---

# I. 발간사

---

홍태림(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현장소통소위원회 위원장)

지금으로부터 7년 전, 정부가 주도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라는 충격적인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블랙리스트를 가장 광범위하게 실행한 기관이 바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였음도 드러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7년에 6기 예술위는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시작될 수밖에 없었다.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예술위는, 2005년에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라는 독임제 기구에서 예술인 중심의 합의제 기구로 나아간다는 기치를 내세우며 출범했음에도 공공성, 투명성, 현장성이라는 핵심 가치를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 대하여 깊이 성찰했다. 그래서 6기 예술위는 아르고혁신TF를 발족시켜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방안은 물론이고 국민과 예술현장으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을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도출했다.

이와 관련하여 아르고혁신TF는 예술위가 당면한 문제를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발휘할 수 없다는 점,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개입에 저항할 민간주체가 부재하다는 점, 폐쇄적인 장르적 사고들에 갇혀 있다는 점, 창작예산의 부족 및 창작과 향유 예산 간의 균형이 없다는 점, 전국적 예술 지원기구로서의 네트워크 능력이 부재하다는 점을 들었다. 이와 같은 진단에 따라서 아르고혁신TF는 23개의 혁신 과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 중에서 소위원회 활성화, 예술현장의 대변자로서의 예술위 역할 강화, 예술위 정책 결정 과정에서 현장 예술인 의견 반영 과정은 2018년에 현장소통소위원회가 출범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이중 소위원회 활성화 과제는 현장소통소위원회를 설치해서 지역별/장르별/분야별 예술현장의 예술인들로 구성된 예술의회로서 기능하도록 권한과 역할을 부여해야 하며 이것이 예술위의 구성 및 운영의 토대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예술의회가 언급된 이유는 예술위가 진정한 예술인 중심의 합의제 기구로 거듭나기 위한 근본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동시에 이는 예술위를 국가예술위원회로 확대 전환하라는 아르고 혁신 1번 과제와 연동되며 구체화되기도 한다. 국가 예술위원회는 구조적인 차원의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문체부의 예술정책 기능을 국가예술위원회로 이관하고 이를 기반으로 상향식 현장 권력형 국가 예술기구를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3기 현장소통소위원회는 아르고 혁신의제와 1~2기 현장소통소위원회의 성과 및 과제를 계승하고자 했고, 예술위와 예술현장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예술위가 진정한 예술인 중심의 합의제 기구로 나아가기 위한 길을 이어가고자 했다. 덕분에 3기 현장소통소위원회는 이전보다 더 역동적인 활동을 이어나가며 여러 성과를 만들어 냈으나, 여전히 여러 과제를 남기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3기 현장소통소위원회는 이 백서를 통하여 그동안의 성과와 과제를 정리하여 국민과 예술현장 그리고 곧 출범할 8기 예술위와 공유하고자 한다.

이번 백서는 소위원회 위원들이 집필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활동의 다양성만큼 각 부분마다 집필자에 따른 서술방식의 차이가 존재한다. 더불어 이런 맥락에 따라서 현장소통소위원회 안에서 완전히 합의되지 않은 다양한 견해들도 충분히 담고자 했다.

이렇게 준비된 3기 현장소통소위원회 백서가 잘 공유되어 예술위가 공공성, 투명성, 현장성이라는 튼튼한 토대 위에서 진정한 예술인 중심의 합의제 기구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를 바란다.

---

## II. 현장소통소위원회 위원 후기

---

### 3기 현장소통소위원회 활동을 돌아보며

이건명(현장소통소위원회 위원)

사람마다 같은 경험을 놓고 전혀 다른 기억을 떠올린다. 여행을 함께 다녀와서도 누군가는 기쁜 기억을, 또 다른 이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회상하는 경우도 있다. 나에게 현장소통소위원회의 소회를 남기는 작업은 이와 같은 서로간의 차이를 내면에 간직한 채 풀어낼 수밖에 없는, 지극히 '개인적인' 백서일 수밖에 없겠다. 아니, 이것은 '백서'에 남긴 '일기' 정도로 해두는 편이 어찌면 마음이 편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청해서 이곳에 기록을 남기겠다고 한 것은 결코 충동적이거나 혹은 공명심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공적 내용 일색인 백서에 공적 역할을 감당한, 한 개인의 사적 기억과 감정이 과연 '백서'에 실린다면, 그것은 백서로서의 공적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나름의 실험으로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다.

'아르코 현장소통소위원회'. 사실 전통예술 분야의 청년예술인으로써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멀기만 한 기관이었다. 지원사업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기관의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했으며, 예술위원회는 커녕 '정책'이라는 말조차 교육과정에서 한 번도 마주한 적이 없었다. 그저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입시를 치르기 바빴고 곁에 있는 동료와 경쟁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폭넓은 관점과 사고의 깊이를 키워내기에는, 우리나라의 전문예술교육이 얼마나 실기 중심이었던지 나의 과거만 돌아봐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 그런 나에게, 이후에 알게 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어렵지만 한 곳이었다. 특히 제1대 위원인 한명희 선생님 부터 2대의 백병동, 조운조 등의 전통음악과 음악계의 명인이 늘어난 위원 명부를 보고 있노라면, 그 반열에 올라야만 비로소 기웃거리볼만한 '어른들의 세계'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다. 그곳에서는 대단한 결정을 할 터이고, 그 결정은 모두 옳을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시간이 흘러, 시대가 변하고 분위기가 바뀌었다. 성인이 되어 어깨에 책임을 지워지는 시간이 쌓이다보니 자연스럽게 나이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지난 날 훌륭한 어른들의 선택과 결정 또한 '무조건' 옳은 것만은 아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에 대한 비판은 커녕 의견조차 내지 않는, 낼 수 없는 분위기를 반복해서 마주하면서부터는 크고 작은 순간마다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 '순응(順應) 할 것인가, 질문(質問) 할 것인가' 처음에는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다. 소위 '눈치'가 보였기 때문이다. 행여나 누군가에게 밉보이지 않을까, 나의 용기로 인해 나만 피해보는 것이 아닌 주변인에게 해를 주진 않을까 등. 갈수록 겁을 내게 되었다. 이십년을 용기 있는 예술가를 꿈꾸며 살아왔지만 어느새 난 겁쟁이가 되어 있었다.

이 모든 두려움을 떨치게 한 사건이 있었다. '세월호'이다. 이 참사가 인생의 선명한 '변곡점(變曲點)'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순히 그 시절 나의 역할이 '교사'여서만은 아니었다. 무고한 300여명의 아이들을 지켜내지 못한 것이 다른 것도 아닌 '국가'라는 사실이 크나 큰 충격이었던 것이다. 당연하다고 믿어온 것의 당연하지 않은 현실을 접한 순간이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악기를 연주하며 음악의 행복을 만끽 해도 시원찮을 나이에 입시와 경쟁에 치인 과거의 나와 똑같은 시간을 보내는 제자들을 마주하며, 이들의 입시를 위한 교육자로서의 삶을 지속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라는 질문과 1년을 넘게 씨름해왔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는 긴긴 고민의 마침표를 찍게 해주었다. 재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은 채 교편을 내려놓던 나에게 중요한 것은, 예술가로서의 대단한 성취와 성공이 아니었다. 그저 예술계에서만이라도

이와 같은 참사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뿐이었다. 작은 일이라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 처음으로 ‘국가’와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극단적인 상황을 마주한 경험은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놓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몇 해 지나지 않아 ‘블랙리스트 사태’가 벌어졌다. 300이 아닌 9000이 넘는 숫자의 예술인 국민과 단체는 정부의 조직적인 억압과 핍박으로 존재를 부정당했으며, 예술가로서의 삶을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깊은 상처를 입었다. 나는 세월호 참사 때와는 또 다른 부채의식에 한동안 일상을 회복하지 못했다.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무얼 해야 할지 몰라 내적 방황에 들어섰던 것 같다. 결코 유쾌하지 않았던 그 시간들은 예술의 현장을 바라보는 또 다른 눈을 갖게 해주었다. 예술적 성취와 비교를 통한 수월성 중심의 관점은 점차 주변을 둘러보고 사각지대를 돌아보게 해주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제도’와 ‘정책’이 예술가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다. 예술위원회의 위원에 당차게 도전했던 것도, 현장소통소위원회의 공모에 자발적으로 지원한 것도 모두 다른 관점에서의 현장을 경험하고, 변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함이었다.

현장소통소위원회에서의 시간은 절대적이지 않아도 일시적, 부분적으로나마 현장과 교감하고 변화를 이뤄 내는 경험을 하게 해주었다. SNS채널과 홈페이지를 통해 마주하는 크고 작은 마찰과 이슈들 또한 실연자로서는 접하기 어려웠던, 하지만 엄연한 현장의 단면인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었다. 예술인 각자의 예술적 성취를 위한 갈급함과 함께,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느 순간 타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리고 불의한 상황에서 옳은 선택을 하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크고 작은 예술가로서의 기회비용들은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깊이 공감할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지역 간담회’였다. ‘코로나 19’로 인해 일정이 하염없이 미뤄졌지만, 현장에서 직접 만나야 한다는 의견이 하나로 모아졌고, 수개월 후에야 비로소 9개 권역에서 대면으로 모임이 이뤄졌다. 무대가 아닌 삶의 자리에서 만난 지역의 수많은 예술인들과 마주한 순간들은 아직도 그 여운이 남아있다. 예술을 위해 예술인이 기꺼이 희생되어지는 현실이 아닌, 지속가능성을 위해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서부터 예술활동을 위한 만족할만한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까지, 충분한 저변을 만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권리이고 수준 높은 예술작품을 창작해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

또 지역의 한 연극 연출가는 “자신의 단체마저 이곳을 떠난다면, 주민들에게 예술적 체험을 하게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에 버텨오다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며,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해온 농부와 같은 예술인의 면모를 일깨워주었다. 자신의 지역이 안고 있는 고유의 문제의식을 스스로 해결하고자 모인 청년 예술인의 용기와 열정에 탄복한 순간도 있었다. 또 한 측면으로는 지역의 예술인을 대하는 지원기관의 태도를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홈페이지나 공문으로 보이는 행간으로는 충분히 느낄 수 없는 인간으로서의 태도는 직접 대면하여 들리는 목소리와 눈빛으로 충분히 가능할 수 있었다. 예술인을 그저 인기의 척도에 따른 가치 판단의 도구로 여기는 공무원이 있었는가 하면, 자신의 일처럼 그 너머의 어려움과 한계를 바라보고, 설령 대안을 찾을 수 없더라도 그마저도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태도를 지닌 담당자도 있었다. 그런 분을 마주할 때면 내 마음도 함께 뜨거워졌다. 결국 문제를 만드는 것도,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지역의 간담회 일정에 참여하고 마지막 서울에서의 모임이 끝나고 난 뒤에는 지역간담회야말로 현장소통소위원회가 가장 잘 수행 할 수 있는, 꼭 해야 하는 미션이 아닐까 싶었다. 그리고 올해 임기를 마치기 전 한 번 더 개최되었으면 했는데 못내 아쉬웠다.

일각에서는 현소위를 ‘민원 창구’로 표현한다. 가끔은 그렇기도 하다. 나도 똑같은 예술인인데, 마치 혜택을 입고 기관을 보위(保衛)하는 존재로 오해하는 목소리를 접할 때면 못내 서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비효율적이더라도 누군가는 아주

사소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어야 한다. 그것이 소통의 기본이라고 본다. 선택적 소통은 결코 소통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힌, 개인이 풀기 어려운 현장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주는 일도 해나가야 한다. 만약 성과의 정도와 일의 효율만 고려해 그런 ‘큰 일’만 감당하고, 현장의 미세한 목소리는 외면한다면 미션의 진정성은 의심받아 마땅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현장소통소위원회의 무수한 회의를 비롯해, 현장의 여러 채널로 들어온 다양한 안건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들은 매개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은 생각보다 넓고 무겁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이번 현장소통소위원회 3기의 백서를 함께 꾸리는 과정에서 2년간의 ‘아르코 대토론회’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산적해 있는 담론과 현안을 훑어보자니, 정말 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그나마 이 정도라도 예술 생태계가 유지되어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딱딱한 대토론회 자료집이었지만, 그 행간에서 예술가로서의 본업을 내려놓고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주고, 다음 세대의 예술인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해온 몇몇 분들의 면면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되묻지 않을 수 없었다. 예술가로서의 성취를 포기하면서까지 생태계를 위한 소모적인 일들을 감당할 필요가 있을까. 둘 다 이룰 수 있다면 당연히 좋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돈으로 시간을 사고,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현대사회에서, 제 몸 하나 누이기 비좁은 공간에 의존해 시간으로 창작을 해나가는 예술인에게 ‘돈’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해결해나가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주어진 환경이 윤택한 소수에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예술적 환경들이 대부분의 청년 예술인, 또 무명이지만 성실하고 탁월한 중견의 예술인들에게는 매정하리만치 냉혹한 현실임에는 부인할 수 없다.

현장소통소위원회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는 결코 현소위를 대표한다거나, 대변하지 못한다. 초두에 밝혔듯 이 글은 공적 기록에 남긴 사적 낙서와 같다. 백서에 일기를 남기며, “가장 사적인 것이 가장 공적인 것이다”라는 말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한 사람의 예술인의 목소리에 성실히 귀 기울여주는 차기 현장소통소위원회가 되길 바란다.

### Ⅲ. 3기 현장소통소위원회 개요

#### 1. 현장소통소위원회 설치 근거

구분	명칭
법률	○ 문화예술진흥법
규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규정(기본규정 및 운영규정, 시행세칙 등)

#### 가. 관련 법령

##### 1) 문화예술진흥법 제32조(소위원회)

###### ■ 제32조(소위원회)

- ① 위원회는 제3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이상의 위원을 포함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 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 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위원회 운영규정

##### 1) 구성

###### ■ 소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 법 제30조 제1항 각 호와 정관 제15조 제1항 각 호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운영함
- 위원장이 지명하는 1인 이상의 위원을 포함하여 해당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 15인 이내로 구성
- 예술장르별 소위원회와 기능별 소위원회 구성 가능

##### 2) 직무

###### ■ 소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 위원회 및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정책연구 개발, 제안 및 이에 따른 조치의 건의
- 위원회가 위임한 분야 또는 특정 사업에 대한 지원심의 및 사업 운영의 모니터링, 사후평가. 단, 심의, 모니터링, 사후평가 결과에 대한 최종 결정은 위원회가 함

- 위원장이 요청한 사업의 집행에 대한 자문
- 기타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평가
-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지원정책과 심의방향에 대한 의견 제시

### 3) 임기

#### ■ 소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임기 중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함
- 위원회의 재적인원 과반 수 이상이 새로 구성될 때는 소위원회 잔여임기와 관계없이 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후 1개월까지로 함. 단, 위원회가 소위원회 임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의결내용에 따름

## 나. 위원회·소위원회 구성 소개

### 1) 위원회 구성

위원회명	주요 논의사항	참여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7기 위원 (위원장 및 비상임위원)	문화예술 현장 대변, 예술 정책 환경 대응	11	박종관(위원장), 박경주, 유은선, 이시백, 이원재, 이진희, 장인주, 전고필, 정유란, 정정숙, 정종열, 홍태림

### 2) 소위원회 구성

소위원회명	주요 논의사항	참여위원	
현장소통소위원회	특정 장르 분야, 현장이슈 에 대한 소통 및 공론화	내부(5)	홍태림(소위원장), 박경주, 이시백, 유은선, 정종열
		외부(8)	김대현(2기 위원 연임), 김선영, 김장근, 김재훈, 신민준, 이건명, 이일록, 이소영, 박연정 * 외부공모로 민간위원 선정
정책혁신소위원회	기관현안, 중장기 대응, 사 업운영개선 등 위원회 정책 논의	내부(4)	이원재(소위원장), 박경주, 정유란, 유은선
		외부(5)	성연주, 성지수, 양혜원, 정윤희, 최도인
성평등예술지원 소위원회	성평등 관점에서 바라본 예술지원 정책 조사 및 연구 활동	내부(2)	강윤주(위원장), 이진희
		외부(5)	김정미, 박소현, 송원, 장현선, 최유진, 홍기원

\* 비상설 소위 운영(사업혁신TF, 다원예술TF, 블랙리스트TF, 성폭력대응TF, 청년예술TF, 코로나19대응TF)

## 2. 3기 현장소통소위원회 위원 공모 과정 소개

### 가. 운영 개요

#### 1) 목적

- 예술현장과의 유연한 소통을 통하여 예술위의 방향성과 제도개선에 필요한 안건을 중심으로 공론화 추진 및 예술현장의 의견 수렴
- 예술현장의 의견이 모이는 창구인 현장소통소위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페이지를 적극 활용하며 이에 대한 운영은 현장소통소위 담당 예술위 위원, 민간위원 그리고 정책혁신부가 담당
- 예술위의 방향성과 제도개선 등과 관련하여 특정 장르별 의견 또는 이슈에 대해 공론화가 필요할 경우 탄력적으로 간담회, 토론회, 연구용역을 발주 등을 진행

#### 2) 구성

- 총 12인 내외로 구성(예술위 위원 이시백, 유은선, 홍태림, 분야별 민간위원 총 7인 내외, 정책혁신부 간사 1인 및 담당자 1인)
- 현장소통소위를 담당할 예술위 위원 외의 예술위 위원도 사안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현장소통소위에 언제든지 참여 가능함

#### 3) 모집 시기

- 신임 3기 민간위원 모집
  - (7.6~7.15) 신임 민간위원 모집 공고(현장소통 홈페이지, 10일간 게시) 예정
  - (7.20~7.23) 서류심사
  - (7.28~7.30) 서류심사 통과자 간담회(면접)
  - (7.31) 최종 민간위원 선정자 위원회 서면의결 예정
  - (8.5) 3기 신임 민간위원 선정자 발표

#### 4) 모집 인원

- 신임 민간위원 모집 : 7인 내외
  - 7기 위원 박경주, 이시백, 유은선, 홍태림 및 2기 현장소위 연임 위촉 예정자 김대현 전 민간위원을 제외하고, 7인 내외의 신임 민간위원 선정 및 구성
  - 신임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이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2회 연임 가능

## 5) 모집 및 선정 방식

### ○ 모집 방식

- 현장소통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모집
- 지원신청서 접수는 이메일(담당자 계정 또는 별도 계정 마련)로 신청

### ○ 선정 방식

- 서류 심사(1차)는 심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7기 예술위원이 진행
- 서류 심사는 기본적인 결격사유 여부 및 해당 장르의 활동경력 및 전문성 심사
- 간담회(2차)는 현장소통소위원회 위원으로서의 활동에 대한 다각적인 토의 진행(1~2시간)

### ○ 심사 기준

구분		1차(서류심사)		2차 심사
평가영역		서류 심사		간담회 (질의응답 포함)
평가항목	항목	<b>개인역량</b>	<b>직무 적합성</b>	<b>간담회</b>
	가중치	20%	20%	60%
	착안 사항	해당 장르의 예술가로서의 개인 역량 평가	해당 장르의 예술인으로서 활동 내역 평가	모든 현장소통소위원회 위원으로서의 활동에 대한 다각적인 토의 진행
선정인원		2배수 면접(간담회) 대상자 선정		7인 내외로 선정

### ○ 기타 사항

- 문예기금 미정산 이력, 윤리적 책무를 위반 및 기타 불법 경력 등이 있는 경우는 결격 처리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거나, 성범죄 혐의 관련 수사 또는 기소를 받은 자는 결격 처리하며, 최종 선정자는 해당사실 없음에 대한 서약서 제출 의무화
- 민간위원 선정 사후 재임기간 중 연간 예술위원회 지원 사업 2건 이상 수혜 불가
- 간담회는 예산 현황 및 참여 인원을 고려해 서울에서 추진 고려

### 3. 3기 현장소통소위원회 위원 소개

#### 가. 위원회 상세 구성

순번	이름	소속 및 현직	생년	성별
1	김대현	문학평론가, 계간 청색종이 편집주간	1975	남
2	김선영 (선아린)	배우	1990	여
3	김장근 (김근)	중앙대 문예창작학과 겸임교수, 시인	1973	남
4	김재훈	음악가, 기획자	1986	남
5	박경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사회적기업 다문화극단 (주)샐러드 대표	1968	여
6	박연정	이팝댄스컴퍼니 대표	1982	여
7	송원	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 대표, 연출·배우	1986	여
8	신민준	시각예술가·문화운동가, 예술대학생네트워크 활동가	1992	남
9	유은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무용원 강사	1962	여
10	이건명	해금연주자, 예술기업 설탕한스폰 대표	1982	남
11	이소영	몸춤 대표	1975	여
12	이시백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소설가	1956	남
13	이일록	독립기획자(도시재생 분야)	1979	남
14	정종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1967	남
15	홍태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3기 현장소통소위원회 위원장 (전)문화비평 웹진 '크리틱-칼' 발행인	1986	남

\* 송원 위원의 경우, 3기 현장소통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선출되었으나 추후 성평등 소위원회로 이동

\* 정종열 위원의 경우, 후임 위원 공모 절차를 통해 신임 8기 위원으로 위촉된 이후('21.2월) 현장소통소위원회 합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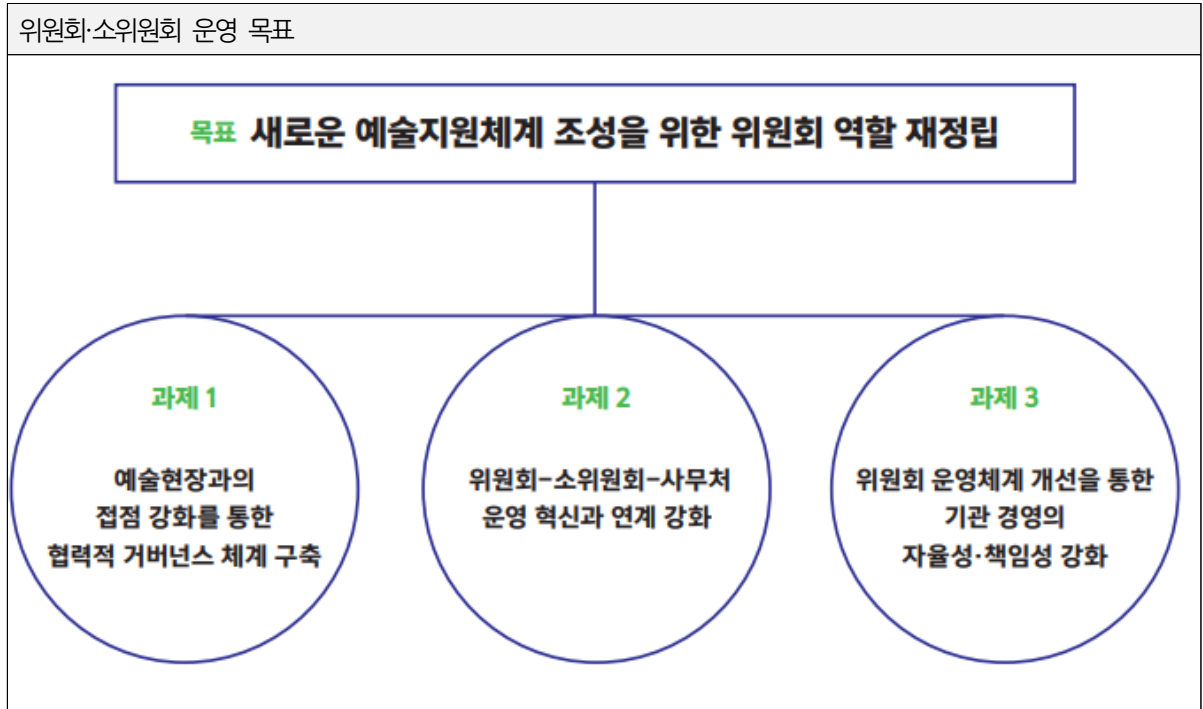
\* 박연정, 이소영 위원의 경우, 성비/장르/지역 등을 고려한 현장소통소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신규 위촉('21.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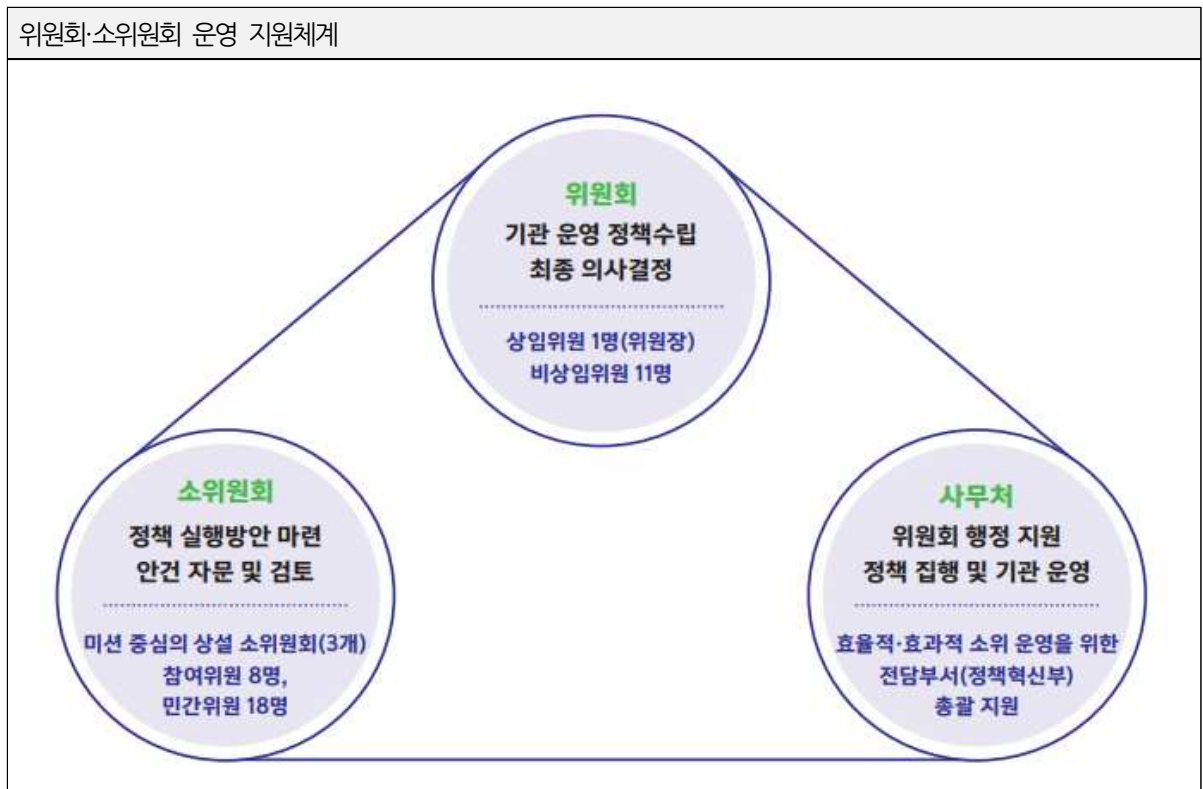
## 5. 현장소통소위원회 자료

### 가. 현장소통소위원회 운영

#### 1) 소위원회 운영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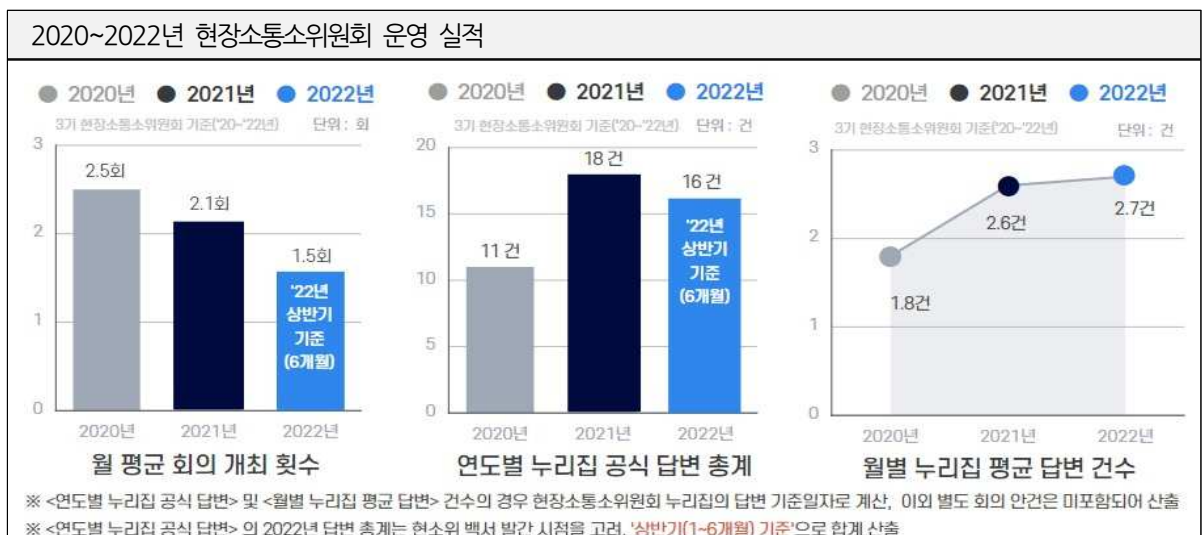
#### 2) 소위원회 운영 지원체계



### 3) 소위원회 운영 현황

소위원회 개편 현황				
+ 기존 소위원회를 개편하고, 예술 현장의 변화 대응을 위한 미션 중심의 TF 신규 구성				
연도	현장소통	예술정책지원	남북 및 국제교류	사업평가
2018~2019년 (현안별)	성평등예술지원	지원협력	예술가치확산	한국예술공론화
	재원확충	미래전략		
2020년 개편 (상설/비상설 소위)	상설 소위원회	현장소통	비상설 소위원회	사업혁신 TF
		정책혁신		코로나19 대응 TF
		성평등예술지원		성폭력 대응체계 마련 TF
2022년 7월, 현재 (상설/비상설 소위)	상설 소위원회	현장소통	비상설 소위원회	다원예술 TF
		정책혁신		코로나19 대응 TF
		성평등예술지원		청년예술 TF
		블랙리스트 방지와 회복		

### 4) 현장소통소위원회 운영 실적



## Ⅳ. 3기 현장소통소위원회 주요 활동

### 1. 현장소통소위원회 정기회의별 안건 목록화

#### 가. 현장소통소위원회 정기회의 안건 정보

회차	안건 목록	개최일자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 및 소위원회 운영현황, 관련 규정 안내</li> <li>○ 아르코혁신TF 혁신의제 추진경과 공유</li> <li>○ 현장소통소위원회 운영방향 논의</li> </ul>	2020.9.3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소통 홈페이지 정책제안(문예지 문학선) 논의</li> <li>○ 문학분야 코로나19 대응 지원 관련 논의</li> <li>○ 소위원회 내부 제안 안건 논의</li> <li>○ 기타 현장소통소위원회 운영 방안 논의</li> </ul>	2020.9.15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심의부) 2021년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추진안 보고</li> <li>○ 공공미술 등 추경사업 관련 논의</li> <li>○ 국공립단체 단원 개인레슨 관련 논의</li> <li>○ 기타 현장소통소위원회 정책제안 논의</li> </ul>	2020.9.22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소통소위원회 홈페이지 정책제안 안건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지원센터 설립, 공연취소 관련 문제, 문학선 대응, 시각예술창작 산실 사업 개선 등</li> </ul> </li> <li>○ 소위원회 내부 정책제안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미술 사업, 예술단원 개인레슨 문제 등</li> </ul> </li> <li>○ 기타 현장소통소위원회 논의사항</li> </ul>	2020.10.6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소통소위원회 홈페이지 정책제안 안건 답변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지원센터 설립, 공연취소 관련 문제, 문학선 대응, 시각예술창작 산실 사업 개선 등</li> </ul> </li> <li>○ 현장소통소위원회 공론화 의제 선정 및 향후일정 논의</li> </ul>	2020.10.20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소통소위원회 홈페이지 정책제안 안건 답변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취소 관련 문제, 문학선 대응, 시각예술창작산실 사업 개선 등</li> </ul> </li> <li>○ 현장소통소위원회 공론화 의제 선정 최종 논의</li> <li>○ 지역간담회 개최계획 추가 논의</li> </ul>	2020.11.3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년 문예지발간지원사업 신청 관련 민원 답변 논의</li> </ul>	2020.11.12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르코 현장 대토론회 진행상황 논의</li> <li>○ 현장소통 홈페이지 정책제안 답변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취소 보상, 2021년도 문예지발간지원사업, 시각예술창작산실 사업 제안, 다원예술 논의 문의</li> </ul> </li> <li>○ 지역간담회 일정 공유 및 참여자 모집문 검토</li> </ul>	2020.11.17

회차	안건 목록	개최일자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르코 현장 대토론회 현장소통 소위원회 세션 진행상황 검토</li> <li>○ 현장소통 홈페이지 정책제안 답변 논의</li> <li>- 시각예술창작산실 사업 제안, 다원예술 논의, 극장운영 방침 문의 등</li> </ul>	2020.12.1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르코 현장 대토론회 안건 논의</li> <li>○ 현장소통 홈페이지 정책제안 답변 논의 - 다원예술 지원 답변 검토</li> </ul>	2020.12.29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회 거버넌스 운영방향 관련 논의</li> <li>○ 아르코 현장 대토론회 사후 논의를 위한 과제 설정</li> <li>○ 현장소통 페이스북 페이지 전환 논의</li> </ul>	2021.1.13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소통 정책제안 재논의(올해의 신작 재심의 관련, 한국소설가협회 불공정행위 관련)</li> <li>○ 위원회 거버넌스 운영방향 관련 위원 정례 간담회 논의결과 공유</li> <li>○ 페이스북 페이지 전환 관련 논의</li> <li>○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계획 보고</li> <li>○ 아르코 현장 대토론회 사후 논의를 위한 과제 설정</li> </ul>	2021.1.27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소통 정책제안 재논의(예술인고용보험 문제, 신나는예술여행 지원자격 확인, 한국소설가협회 불공정행위, 예술활동증명 예명 확인 문제 등)</li> <li>○ 아르코 현장 대토론회 사후 논의를 위한 과제 설정</li> <li>○ 이주민예술가 지원 공론화 방안 논의</li> <li>○ 지역간담회 일정 논의</li> </ul>	2021.2.10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르코 현장 대토론회 후속 논의 진행</li> <li>○ 지역간담회 추진계획 및 방법 논의</li> <li>○ 이주민예술가 지원 공론화 방안 논의</li> <li>○ 현장소통 정책제안 논의</li> <li>- 예술활동증명 예명 확인 답변 검토, 한국소설가협회 관련 답변 검토, 아카데미 자료 제출방식 건의에 대한 답변 검토, 문예지발간지원사업 아동청소년분야 지원관련 질의 답변, 예술인고용보험 문제 논의</li> </ul>	2021.2.24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위 온·오프라인 잡지 창간 제안(김대현 위원 발제)</li> <li>○ 지역간담회 추진계획 논의</li> <li>○ 예술인비자문제 개선 공청회 계획(안) 공유 및 논의</li> <li>○ 현장소통 정책제안 논의</li> </ul>	2021.3.10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 포스트 활용한 온라인 공론장 운영방향 논의</li> <li>○ 지역간담회 추진계획 논의</li> <li>○ 현장소통 정책제안 논의(지원사업 음악장르, 문예지 선정취소 건, 아동 청소년문학 지원 건 등)</li> </ul>	2021.3.24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년 현장소통소위원회 운영방향 논의(워크숍)</li> </ul>	2021.4.7 (13:00~15:00)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소통 정책제안 답변논의(지원사업 음악장르 지원, 문예지 선정취소, 아카데미 자료제출방식 개선 등)</li> <li>○ 온라인 공론장 운영방안 논의</li> <li>○ 지역간담회 추진방안 논의</li> </ul>	2021.4.7 (15:00~17:00)

회차	안건 목록	개최일자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공론장 운영방향 논의</li> <li>○ 지역간담회 추진계획 논의</li> <li>○ 현장소통 정책제안 논의(장수군 꿈꾸는예술터, 문예지 선정취소 건 등)</li> </ul>	2021.4.21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간담회 추진결과 공유</li> <li>○ 현장소통 정책제안 논의(문예지 선정취소 건, 자부담 개선, 온라인미디어 지원사업 자부담완화 등)</li> </ul>	2021.5.6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공론장 준비현황 공유</li> <li>○ 지역간담회 진행현황 공유</li> <li>○ 현장소통 정책제안 답변 논의(장수군 꿈꾸는 예술터,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시와 반시 등)</li> </ul>	2021.5.20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공론장 진행경과 공유 : 1회차 원고청탁 진행 완료, 2회차 준비 예정</li> <li>○ 지역간담회 종료 이후 상황 공유 및 논의</li> <li>○ 문학분야 공정생태계 관련 공론화 현황 공유</li> <li>○ 현장소통 페이스북 운영 규칙 보완 및 규칙 미준수자 제재 필요성 논의 : 두 번 경고 후 제재 조치 시행</li> <li>○ 현장소통 정책제안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원예술 동료평가 내용 관련 대응 방안 논의,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정산 절차 개선 관련 답변 보완 논의, 장수군 꿈꾸는 예술터 운영 문제 : 온라인 공론장 및 유관기관 협력 논의 예정으로 답변 작성, 광주시립극단 관련 문제 : 답변 보완 후 게시 예정, 시각예술 전시소개 내용 관련 : 조치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게시 예정</li> </ul> </li> </ul>	2021.6.16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공론장 준비현황 공유</li> <li>○ 지역간담회 후속 논의</li> <li>○ 현장소통 페이스북 운영 규정 개정사항 공유</li> <li>○ 2022년 예산 수립 현황 공유</li> <li>○ 다원예술 동료평가 대응상황 공유</li> <li>○ 현장소통소위원회 정책제안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수군 꿈꾸는 예술터 후속 논의, 과천시의회 문화예술 축제지원 관련 논의, 대한민국 공연예술제 정산 절차 개선, 심의과정 및 결과에 대한 건의 논의</li> </ul> </li> </ul>	2021.6.30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공론장 진행현황 공유</li> <li>○ 지역간담회 자료집 정리 현황 공유</li> <li>○ 신규 위원 선임 관련 논의</li> <li>○ 다원예술 동료평가 후속대응 논의</li> <li>○ 현장소통소위원회 정책제안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수군 꿈꾸는 예술터 후속 논의, 과천시의회 문화예술 축제지원 관련 논의, 대한민국공연 예술제 정산 절차 개선, 심의과정 및 결과에 대한 건의 논의</li> </ul> </li> </ul>	2021.7.14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공론장 진행현황 공유</li> <li>○ 지역간담회 자료집 정리 현황 공유</li> <li>○ 신규 위원 선임 관련 논의</li> <li>○ 현장소통소위원회 정책제안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수군 꿈꾸는 예술터 후속 논의, 과천시의회 문화예술 축제지원 관련 입장문 논의,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심의과정 및 결과에 대한 건의 논의</li> </ul> </li> </ul>	2021.7.19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소통 정책제안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사업 제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체육분야 지원 제언에 대한 답변 게시, 신진예술인 연령별 세분화 지원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으로 답변 보완 게시</li> </ul> </li> <li>○ 현장소통소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 논의</li> <li>○ 다원예술 동료평가 발표결과 관련 논의</li> </ul>	2021.7.28

회차	안건 목록	개최일자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위원 위촉 관련 면담 진행</li> <li>○ 현장소통 정책제안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진예술인지원기준 개선 제안, 예술활동증명 중 예명확인절차 문의, 동료 평가제 심의제도 폐지 관련 의견</li> </ul> </li> <li>○ 2022년 정시공모 관련 현장소통소위원회 의견수렴방안 논의</li> <li>○ 대한민국예술원 쟁점 논의</li> </ul>	2021.8.11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소통 정책제안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활동증명 중 예명확인절차 문의, 동료평가제 심의제도 폐지 관련 의견</li> </ul> </li> <li>○ 2021년 추경사업(예술로 기록사업) 경과보고 및 대응 논의</li> <li>○ 대한민국예술원 입장문 발표 사후 대응방안 논의</li> <li>○ 지역간담회 결과자료집 활용현황 공유</li> <li>○ 신규 위원 위촉경과 및 활동계획 공유</li> </ul>	2021.8.25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소통 정책제안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활동증명 중 예명확인절차 문의, 이주민예술인비자제도 개선과 지원 정책 제안</li> </ul> </li> <li>○ 2022년 정시공모사업 개선방향 논의</li> <li>○ 대한민국예술원 관련 입장문 발표 후속 대응 논의</li> </ul>	2021.9.8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소통 정책제안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정산개선 제안 진행경과, 다원예술 관련 정책제안 진행경과</li> </ul> </li> <li>○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정책협의기구 역할 강화 논의(아르코 혁신의제)</li> </ul>	2021.9.28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소통 정책제안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정산개선 제안 진행경과, 다원예술 관련 정책제안 답변 준비 진행경과</li> </ul> </li> <li>○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평가방식 개선 연구방향</li> <li>○ 2021년 아르코 현장 대토론회 추진계획</li> </ul>	2021.10.13
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소통 정책제안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정산개선 제안 간담회 경과 공유, 다원예술 관련 정책제안 초안 논의, 올해의 레퍼토리 사업 개편 관련 논의</li> </ul> </li> <li>○ 세종문화회관 사장 임명 관련 문제</li> <li>○ 블랙리스트TF 요청안건(정책결정 과정의 현장의견 반영 과제)</li> <li>○ 2021년 아르코 현장 대토론회 추진계획</li> </ul>	2021.10.27
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소통 정책제안 답변 논의(창작산실 사업개편, 대한민국예술제 정산 절차 간소화 등)</li> <li>○ 2021년 아르코 현장 대토론회 추진계획</li> </ul>	2021.11.10
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소통 정책제안 답변 논의(웹진 저작권 관련 제안, 대한민국예술제 정산 절차 간소화 등)</li> <li>○ 2021년 아르코 현장 대토론회 추진계획</li> <li>○ 현장소통소위원회 백서 제작 계획 논의</li> </ul>	2021.11.27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년 아르코 현장 대토론회 추진계획</li> <li>○ 현장소통소위원회 백서 제작 계획 논의</li> </ul>	2021.12.6
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소통 정책제안 답변 논의</li> <li>○ 2021년 아르코 현장 대토론회 후속 논의</li> <li>○ 현장소통소위원회 백서 제작 계획 논의</li> </ul>	2021.12.22

회차	안건 목록	개최일자
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소통 정책제안 답변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학집필공간 부악문원 운영 문제 제기, 웹진 문예지 저작권 문제 개선, 다원예술 지원사업 정상화 촉구제안, 문화예술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처벌 제도 제안, 코로나19로 인한 지자체 계약취소에 대한 매뉴얼 제안, 공연 연습공간 대관 서비스 개선</li> </ul> </li> <li>○ 나주 워크숍 추진계획 논의</li> </ul>	2022.1.5
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소통 정책제안 답변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로 인한 지자체 계약취소에 대한 매뉴얼 제안, 문화예술계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논의, 서울문화재단 출신 편집부 개편 문의, 2022년 문예지 발간 지원사업의 문제점과 시정대책 제안 논의</li> </ul> </li> <li>○ 백서 추진 계획 및 방향성 논의</li> <li>○ 무용계 의제 공론화 방안</li> <li>○ 코로나19 관련 입장문</li> <li>○ 현소위 페이스북 운영규정 보완</li> </ul>	2022.2.9
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소통 정책제안 답변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학집필공간 부악문원 운영 문제 제기, 다원예술 지원사업 정상화 촉구 제안, 공연연습공간 대관 온라인 서비스 개선</li> </ul> </li> </ul>	2022.1.18~1.19 (워크숍 포함)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소통 정책제안 답변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계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논의</li> <li>- 2022년 문예지발간 지원사업의 문제점과 시정대책 제안 논의</li> </ul> </li> <li>○ 코로나19 관련 입장문</li> </ul>	2022.2.23
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소통 정책제안 답변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계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논의, 2022년 문예지발간 지원사업의 문제점과 시정대책 제안 논의</li> </ul> </li> <li>○ 정책제안 홈페이지 운영 보완 방향</li> <li>○ 백서 구성 방향</li> </ul>	2022.3.14
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소통 정책제안 답변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 문예지발간 지원사업의 문제점과 시정대책 제안 논의, 2022년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 관련 문의</li> </ul> </li> <li>○ 현장소통 홈페이지 정책제안 운영방안 개선</li> <li>○ 3기 현장소통소위원회 백서 진행상황 공유</li> </ul>	2022.3.28
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소통 정책제안 답변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 창작산실 올해의 레퍼토리 지원사업 삭제에 대한 문의</li> </ul> </li> <li>○ 3기 현장소통 소위원회 백서 진행사항 논의</li> <li>○ 코로나19 관련 입장문 진행 방향 논의</li> <li>○ 무용계 안전한 창작환경 구축을 위한 공론 과제 회의 내용 공유</li> </ul>	2022.4.13
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소통 정책제안 답변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예술연습공간 창원 지부의 집기류 교체 제안</li> <li>- (KR) E-6 비자 획득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서 자동 발급 요청 (EN) E-6 visa holders should automatically be issued an arts activity certificate by KAWF*</li> </ul> </li> <li>○ 3기 현장소통 소위원회 백서 취합 현황 공유</li> <li>○ 현장소통 홈페이지 정책제안 운영방안 개선 재논의</li> </ul>	2022.5.25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소통 정책제안 답변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주조선대학교 공연예술무용과 교원 임용 불공정 및 학생 대상 교수 불공정 행위 건</li> </ul> </li> <li>○ 3기 현장소통 소위원회 백서 취합 최종본 공유 및 검토</li> </ul>	2022.6.29

## 2. 현장소통소위원회 홈페이지 정책제안 답변 유형화

이일록(현장소통소위원회 위원)

### 가. 현장소통소위원회 홈페이지 정책제안 분석

#### 1) 분석 대상

- 기간 : 2020.03.~2022.03. (총 25개월)
- 항목 : 현소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총 38개의 정책제안을 대상으로 함  
<https://sotong.arko.or.kr/communication/suggestion.do>
- 구체적인 질문 및 답변 등은 이후 나오는 ‘현장소통 홈페이지 정책제안 및 답변 모음’ 참조

#### 2) 정책 제안 <영역>

- 특정 장르로 분야를 나누는 것이 어려운 사례들이 많아 ‘영역’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였으며 이 표현 속에 장르, 주제, 특정 이슈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자 하였음
- 해당 시점(2020.03.~2022.03.)의 경우 코로나19 라는 전 세계적인 특이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19를 별도의 영역으로 특정함

영역	코로나 19	문학	예술 지원	다원 예술	예술인 복지	축제	음악 공연	컴퓨터 사업	이주민	기타	합계
	4	7	8	2	5	3	2	1	1	5	38

- 특정 영역에 많은 정책제안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주제(영역)이 문제가 많다고 볼 수는 없음. 단, 많은 예술가 (혹은 단체)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단초는 될 수 있음
  - 타 기관 관련 사례 : 총 7건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5 / 서울문화재단 : 1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1
- 타 공공기관의 사업과 관련된 정책제안은 의미 있는 현상으로 볼 수 있음. 이는 아르코가 가지고 있는 대표성으로도 볼 수 있는 반면, 해당 기관 안에서 문제 해결이 잘 되지 않았다는 반증으로도 예상해 볼 수 있음. 정책제안을 해결하는 과정에는 최대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해당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하였음. 근본적인 해결책(해당 기관에 관련 기구의 상설화 등)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짐

#### 3) 키워드 분석

- 키워드 분석은 위의 <영역>에 대한 부분을 보완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 임의로 분야를 나누기는 하였으나 문제 속에서 발견되는 키워드 등을 통하여 질문자의 의도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파악하고자 함



○ 현소위의 정책제안은 한편에서는 '민원창구'라고 바라볼 수 있을 만큼, 현장과 밀접하게 소통하며 공감하는 기회였다. 한 명의 예술인이 처한 어려움을 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치열하게 토론하며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 가운데, 나름의 기준과 가치가 정립되었으며, '행정의 시간'을 넘어 '예술인의 시간'을 배려하는 순간이었다. 현소위 위원들의 공이 크겠으나, 참여한 입장에서는 오히려 아르코 임직원분들께 감사를 전하고 싶다. 특히, 어려운 조율 과정 속에 수차례 피해 예술인을 직접 찾아가 공감과 동의를 얻어낸 노력은 밖에서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진심어린 태도였기에, 오히려 기관을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끊임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예술의 현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현소위의 정책제안은 피곤하고 고된 시간임에 분명했지만, 한 사람의 예술인으로써 그만큼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 현소위 위원들의 입장

○ 활동 초기에는 민원을 해결하는 민원창구인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였음. 그러나 이후 계속해서 고민을 하는 가운데 질문을 올리는 예술가들의 절박함이 느껴져서 활동에 집중을 하게 된 측면이 있음

## 5) 총평

- 현소위 위원들과 아르코 담당자(부서)의 성실함과 진지함의 결과물
- 예술가들이 민원의 창구가 절실하구나 하는 방증의 사례들
- 공공기관의 민원 사안들을 조율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구의 필요성

## 6) 향후 과제

- 실효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내외부의 실증적 권한 획득의 과정 필요
- 지난 현소위 활동에 대한 평가(정책제안 부문 중심)를 통한 지속성에 대한 내부 동의 과정의 필요성

## 7) 현장소통 홈페이지 정책제안 및 답변현황(2020.3~2022.3)

- 백서 페이지 45쪽 참고

### 3. 예술인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공청회

박경주(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현장소통소위원회 위원)

#### 가. 예술인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온라인 공청회 요약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현장소통소위원회는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예술인의 예술인비자 문제(E6)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이주민 예술인의 한국 내 안전한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자, 2021년 4월 16일(금) 오후 2시에 온라인 공청회를 실시했다. 국회 법사위 김남국 의원실의 후원, 재한 필리핀인 온라인포털 피노이 서울의 협찬으로 열린 공청회는, 10여년 전 E6 비자로 입국해 아프리카 박물관에서 일하다 노동권과 인권을 침해당했던 부르키나파소 출신 현대 무용가 엠마누엘 사누가 예술가의 집 단상에 올라 더 소중했다. 그는 차별에 저항하기 위해 한국에 남아야만 했던 이유를 큰 목소리로 전달했다. 사누 외에도 닉키 프랑스(작곡, 필리핀), 석알 마문(영화, 방글라데시), 올리버 그림(미디어아트, 독일), 일레인 베가(배우, 미국) 씨 등 다양한 국가 출신의 이주민 예술가들이 예술가로서 직접 한국의 출입국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그 의미가 더욱 컸다. 또한 유튜브 생중계를 지켜보던 사샤 폴렌과 엘리엇 우드, 존 마이클 등 30여명의 이주민 예술가들이 법무부 예술인비자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온라인 댓글로 열띤 토론을 벌였고 공청회 사회자에게 낯선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사샤 폴렌과 엘리엇 우드 그리고 존 마이클은 공청회 이후 현장소위에 E6 비자와 관련된 정책제안을 했다.

#### SUGGESTED PROCEDURE FOR CONTINUATION OF THE DISCUSSION

We (Ell\*\*\* \*\*\*\*\* and Sa\*\*\*\*\*, ell\*\*\*\*@kimchiandchips.com, sa\*\*\*\*\*@yahoo.com) consider this as a first rough framework for how the next steps can proceed. This could either be carried out by ourselves or ideally adapted together with other interested parties.

1. Initiation (what already happened with the ARKO online hearing)
- 2 . Gather a team to coordinate ← this is where we are now
3. Consultation sessions
  - a. A series of zoom video conversations around each of the topics below one-by-one
  - b. A set of notes and conclusions from each session
4. A set of proposals/suggestions
  - a. A single document suggesting amendments to the artist visa
5. Discuss proposals/suggestions with ARKO / other public stakeholders in Korea
  - a. Consider which regulations ARKO can change on their own behest, and which need to be discussed with other organizations
6. Propose together with ARKO / other stakeholders to the relevant parties (e.g. Immigration Office, Ministry of Culture)

- TOPIC SESSIONS -

These are potential topics for follow-up discussion sessions. Principally, it is important to start to structure/categorise the issues so that they can be addressed individually (rather than keeping all discussions general to all points). We can invite people relevant to each topic. Ideally, we need to find people with expert knowledge and experience in these areas, e.g. visa lawyer, Arko staff member, human rights, artists.

HUMAN RIGHTS ISSUES:

- Sexual abuse
- Abuse of power by employers
- Workers rights
- Taking extra money from artists in order to create paperwork for visa
- Students / Graduates in the arts continuing to work in Korea Entertainment / Modelling
- Payments from Agencies
- Withheld payments

CONTEMPORARY ARTS/ FINE ARTS/ PERFORMING ARTS/DANCE/THEATRE/MUSIC:

- Exhibition visas (currently institutions don't do this) Longer-term visa for artists active in Korea
- Eligibility for foreign artists to apply for funding (ARKO, SFAC, GFAC, etc). What is the requirement, e.g.:
- Artist is resident in Korea for a minimum residence period of 2 years (European model)
- The project engages with audiences inside of Korea (Arts Council England model)
- Visa requirements or not?

FAMILY ISSUES

LANGUAGE, CULTURE, INTEGRATION

VISA TYPES:

- Possibilities to make extra/sufficient income under each visa type
- Duration of stay
- Requirements
- Ability to develop new activities in the arts whilst in the country without applying for a new visa
- Too many different visa types that are only bound to specific contracts
- suggested visa type for various creative/cultural professions is Artist Visa and or "self-employed"

We are in contact with a network of 50 - 100 foreign artists working in Korea through a range of other activities. We can coordinate sets of people to participate in these topic sessions.....

공청회에서 주로 다뤘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발제를 맡은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임 연구원 김철호 박사는 이주민 문화예술인의 인권보호 및 예방을 위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며 우수 인재 및 인력 유치를 위하여 외국인 정책 및 유학생 정책에 문화예술 분야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유학생은 졸업 후 예술연예(E-6-1), 특정활동(E-7) 체류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올바른 정책을 만들기 위해 이주민 문화예술인의 실태 및 요구 조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소라미 교수, 현장소통소위원회 신민준 위원, 정부 문화다양성위원회 석알 마문 위원, 법무부 체류관리과 이취경 사무관이 함께 참여한 토론에서 참가자들은 문화예술 관련 체류제도를 시대변화에 따른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했다. 이취경 사무관은 순수예술을 비롯한 문화예술의 다양한 분야를 포섭하는 문화예술 체류제도 마련, 예술인 직업의 특성상 독자적인 지위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 체류제도의 마련, 유학생 등 다른 체류자격 소지자가 국내에서 다양한 경로로 문화예술 분야에 진입할 수 있는 관련 절차 마련 등의 약속과 함께 공청회 이후 법무부에서도 자체적으로 간담회를 주최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 ■ 법무부 체류관리과 간담회 요약 (요약자료 별첨 48페이지 참고)

2021년 4월 27일 오후3시, 과천종합청사 법무부 회의실에서 현장소위 (참석위원: 박경주)와 일레인 베가, 체류관리과 과장 및 담당자가 참석한 간담회가 열렸다. 법무부는 이 자리에서 그간 예술인비자 정책은 E-6-2의 인신매매방지 위주로 추진돼 그 한계가 있었다며, 문화예술진흥 및 대중문화발전 등을 위한 미래지향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기존 비자체계는 전통적 고용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독자적 지위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 분야에 적합하지 않은 단점이 있다면서 프리랜서 타입의 체류자격의 시범 도입을 고려해 볼 수는 있다고 전했다. 다만, 내국인 문화예술인의 활동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프리랜서 타입의 예술인비자만 발급한다고 하여 외국인 예술가의 생계유지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일레인 베가는 현재 한국의 경우 문화예술 분야의 특별한 전문성 없이 소속사에서 초청한 외국인이나, F계열(거주, 동반 등) 기존 체류자 위주로 활동하고 있어, 외국 문화예술인에 대한 인식저하가 우려된다면서, 해외 학위나 문화예술분야 활동경력을 토대로 우수한 문화예술인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기존 E-6-1과 E-6-2는 활동범위나 자격요건 등을 완전히 분리하고, 새롭게 도입될 프리랜서 타입의 E-6-1의 활동범위는 순수 문화예술과 대중문화 등 문화예술 전반의 활동까지 확대하여 인정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다고 협의했다. 법무부는 국내에서 문화예술을 전공한 유학생의 우대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며, 향후 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3~27) 수립 시, 우수인재 범주에 '문화예술'인재를 포함하여 논의를 지속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특정분야별 외국인정책을 추진할 때는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관심과 지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술인비자 문제는 문체부와 더 집중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 성과 및 후속과제

현장소위(담당위원: 박경주)는 예술위 공청회 이후 문화다양성위원회 위원에게 포럼내용을 보고하고 자료를 전달했으며, 법무부 간담회 이후 체류관리과에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의 프리랜서 타입 예술인 비자관련 자료를 전달했다. 체류관리과는 이 자료를 문화다양성위원회 산하 관계부처 회의에서 문체부에 전달했다. 한편, 예술인 비자제도 개선문제는 1기 문화다양성위원회 과제로 선정돼, [문화다양성보호및증진기본계획 수립을위한기초연구]에 포함돼 2021년 말 연구가 완료됐다. 법무부는 현재 예술활동의 직업적 특성을 반영한 프리랜서 타입 비자의 신설 또는 점수제 비자 (F-5-11)의 요건완화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예술인 비자를 둘러싼 문제제기와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년간 국가인권위와 인권단체를 통해 사회적 화두가 돼 왔다. 그러나 예술진흥비자 (E6-2) 소지 외국인 예술가에게 발생한 인권침해와 노동권 침해, 성폭력 사건에 사회적 시선이 집중되는 동안, 정작 이들이 갖고 있는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한 번도 진지하게 논의된 바가 없다.

10년 전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출신 현대 무용가 엠마누엘 사누가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며 언론 앞에서 한국의 예술인 비자 시스템의 문제를 처음으로 고발했다. 사건이 해결되고 나서 함께 했던 동료들은 귀향길에 올랐지만 그는 한국에 남았다. 그는 예술인 비자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 2021년까지 한국에 남아 아프리카 출신 현대무용가이자 안무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사누 안무가가 공청회에 참석해 쏟아낸 단어 하나하나, 그리고 청중을 압도하는 그의 강렬하고 설득력 있는 목소리는, 마치 한국 사회가 이주민 예술가를 따뜻하게 안아줘야 할 시간이 왔음을 선포하고 있는 듯했다. 예술인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온라인 공청회가 '프리랜서 타입 예술인 비자 제도의 도입'이라는 작은 성과를 내게 된 것은 엠마누엘 사누와 같이 차별과 인권침해를 딛고 문화창조자이자 매개자로서 매일 매일 문화예술 현장에서 투쟁하고 있는 이주민 예술가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어서 가능했을 것이다.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다. 우선적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제도에 정착 예술인 비자 소지자는 신청자격이 없다는 것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다. 예술인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문체부 장관과 산하 기관의 초청서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주민 예술가의 처우에 관한 사안은 법무부가 아니라 문체부의 몫이다. 법무부 뿐만 아니라, 문체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그리고 한국문화 예술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 더욱 책임있는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이유다.

## 4. 현장소통소위원회 입장문

김재훈, 신민준(현장소통소위원회 위원)

### 가. 현장소통소위원회 입장문의 취지

#### 1) 문화예술 현장과 함께하는 소위원회

- 다수의 현장 예술인으로 구성된 현장소통소위원회는 정책제안 홈페이지, 페이스북 그룹에 제안된 내용 외에도 공론이 필요한 주요한 문화예술계 현안에 대해 공론 및 대응하고자 하였음
- 중요하게 공론되는 현장의 문제에 대하여 위원들이 중요 사안으로 판단한 문제를 회의 안건으로 다루었으며 필요에 따라 입장문 작성 여부를 논의하였음
- 또한, 현장의 예술인 및 단체가 직접적으로 연대를 요청할 경우에도 안건으로 상정하여 입장문을 작성함.
- 블랙리스트, 미술은행, 코로나19 대응, 대한민국예술원, 다원예술 동료심의제 등 문화예술계에서 주요하게 공론화된 문제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함

#### 2) 소위원회 권한 밖 문제를 공론을 통해 연대

- 문화예술계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일부 또는 다수 위원들이 문제제기의 배경에 공감할지라도 한국문화예술 위원회라는 기관의 산하 소위원회로서 자격과 권한의 한계가 뚜렷하였음
- 타 중앙기관, 지자체, 민간 등에서 발생하는 이슈는 소위원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문제로, 직접적인 시정 조치를 시행하거나 권고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 이 때문에 입장문 발표를 통해 소위원회의 권한과 해결범위 밖의 문제일지라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현장 소통소위원회가 현장 예술인으로 구성된 의회이자 예술인의 대표 격으로서 문제에 대해 공감하며 연대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하였음

### 나. 현장소통소위원회 입장문 내용

순	입장문	발표일
1	<p>&lt;2021년, 해결되지 않은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아르코 3기 현장소통소위원회 입장문&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와대, 국회의 블랙리스트에 대한 대응 미흡 비판 및 공식적 인정 및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촉구</li> <li>• 국회의 블랙리스트에 대한 정쟁적 인식 비판 및 블랙리스트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사회적 기억 사업과 예술인권리보장법 통과 촉구</li> <li>•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수직적 구조 비판 및 자율운영협약서 체결 촉구</li> <li>•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블랙리스트 후속조치 미흡과 관성적 소위원회 운영비판 및 기초-광역-중앙의 거버넌스 로드맵 마련 촉구</li> <li>•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블랙리스트에 대한 안온한 조치 비판 및 예술인 친화적 행정 반영 촉구</li> </ul>	2021. 01.08

2	<p><b>&lt;미술은행 응모자격은 공공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는가?&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21 미술은행 공모자격 변경의 공공성과 공정성 관련 문제제기</li> <li>• 2020 공모자격에 국·공·사립 미술관 전시 경력 추가 비판</li> <li>• 2021 공모자격에 화랑협회 소속 화랑 전시 경력 추가 비판</li> <li>• 독립성을 추구하는 예술인을 포함하여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개선안 촉구</li> </ul>	2021.02.25
3	<p><b>&lt;마포구청은 현장 예술인의 목소리에 응답하길 바란다&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지자체의 지역 내 소규모 공연장(인디) 공연 강제 취소에 대한 비판</li> <li>• “공연장은 세종문화회관 같은 곳이지,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된 곳에서 공연하는 것은 칠순잔치”라는 공무원의 모욕적 발언의 비판과 사과 촉구</li> <li>• 관광에 의한 경제적 효과 등을 이유로 도구적으로 문화예술을 이용한 정책이 아닌 현장 문화예술 생태계 중심적 정책 마련 촉구</li> </ul>	2021.04.07
4	<p><b>&lt;과천시의회 의원이 문화예술인에게 행한 모욕적 발언에 대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현장소통소위원회 입장문&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과천시의회와 과천축제 예산 전액 삭감 및 과천문화재단 예산 삭감에 대한 유감 표현</li> <li>• 예산 삭감 과정에서 예술인들과 지역주민들이 25년 간 만들어온 축제에 대하여 공론과 소통의 과정이 없었음에 대한 비판</li> <li>• 의회 권력에 의한 예술인의 배제가 시민 배제로서 블랙리스트와 동일한 구조임을 비판</li> <li>• “이 분들은 본인 돈만 중요하고 본인 사업 진행하는 것만 중요합니다. 코로나가 터지든 말든 재난사태이든 말든... 이런 분들이 과천시의 예산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등 시의원의 모욕적 발언의 비판과 사과 촉구</li> </ul>	2021.07.23
5	<p><b>&lt;대한민국예술원 개혁 논의에 대한 현장소통소위원회 성명서&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 예술인의 정서에 맞지 않는 대한민국예술원의 폐쇄적인 입회 방식 및 예술원상에 대한 비판 및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한 방안 마련 촉구</li> <li>• 2019년 공론 과정 없이 밀실 추진된 「대한민국예술원법」 개정의 종신 회원권 보장 비판 및 중임제 변경과 비민주적 요소 개선</li> <li>• 회원 다수가 은퇴 교수 등으로 별도 연금 수급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신으로 제공되는 월 연금 180만원의 부적절성 지적 및 관련 개선 촉구</li> <li>• 원로 예술인 외 다음 세대 예술가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장치 마련 및 공공기관으로서 예술원의 현장 예술인 지원 역할 강화 촉구</li> </ul>	2021.08.17

6	<p>&lt;2021 다원예술 활동지원 사업 내 블라인드 방식 동료평가 심의제도 도입에 대한 현장소통위원회의 입장문&gt;</p>	2022. 01.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수 전문가 심의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도입한 동료심의제도의 미흡한 운영에 대한 유감 표현</li> <li>• 블랙리스트 이후 폐지되었던 ‘다원’ 장르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다원 장르 예술인과 소통과정의 부재에 대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유감 표현</li> <li>• 한국문화예가 심의제도에 대한 사과 및 후속조치 안내문&gt;의 확실한 이행과 다원 장르 예술인술위원회의 &lt;2021년 다원예술 활동지원 사업 내 블라인드 방식 동료평가 소통 촉구</li> </ul>	

\* 입장문 전문은 별첨 50페이지 참고

## 다. 현장소통소위원회 입장문 총평

###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현장 대변 및 소통 강화

- 문화예술계에서 발생한 주요한 문제 및 현안에 대해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여 현장 예술인을 대변하고 소통하는 의회로서 기능을 실현해보고자 하였음

### 2) 분할된 행정 체계에서 발생시키는 칸막이 문제를 예술인을 중심의 공론을 통해 조정 기능 발휘

- 문화 행정과 정책이 국회, 중앙정부, 지자체 및 다양한 문화기관 등으로 분할되어 각 영역의 책임과 권한이 문제가 되는 ‘칸막이’ 현상 발생
- 입장문을 통해 칸막이 행정 체계 내에서 현장 예술인들의 권리 중심으로 정책 및 사안이 조정될 수 있도록 공론 기능을 발휘할 수 있었음

### 3) 연대로서 현장 예술인 조력 역할

- 권한 밖의 문제는 직접적인 해결이 불가능할지라도 현장 예술인을 대변하고자 하는 역할을 가진 소위원회로서 사안 공론화 및 해결 과정에 일부 조력이 되었음

## 라. 향후 과제

### 1) 입장문 작성의 민주성과 책임 강화

- 현장소통소위원회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할 사안에 대하여 위원마다 생각이 상이하나, 일종의 전원 합의제 구조로 이행되어 몇몇 사안은 입장문을 발표하지 못하였음

- 따라서 입장문 안건 제청과 상정, 작성 여부의 명확한 표결, 찬반 위원 표기 등을 통해 현장 예술인을 대변하는 역할로서 위원들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주필과 검토를 수행하는 위원이 다소 편중되어 향후 입장문 발표의 프로세스와 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2) 입장 발표 이후 후속 조치 강화**

- 입장 발표 이후에도 현장소통소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사안은 책임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기구로서의 역량과 지위 강화 필요
- 소위원회 기능 강화와 실행력 발휘는 현장소통소위원회 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전체가 해당하는 사안으로서 전체 소위원회가 실행 중심으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조적 개선이 필요함

## 5. 1·2회 아르코대토론회

이건명(현장소통소위원회 위원)

### 가. 2020-2021 아르코 현장 대토론회 비교 분석

#### 1) 주제 및 이슈 분석

구분	제1회 대토론회(2020)	제2회 대토론회(2021)
주제	예술현장과 소통하는 열린 소위원회, 더 나은 예술환경을 위해	문화예술의 도전과 변화,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밝힌다
이슈	[이슈 1] 변화의 시기, 예술지원의 방향	[이슈 1] 문화예술의 도전과 변화
	[이슈 2] 공정한 예술생태계	[이슈 2] 문화예술의 현재성 진단
	[이슈 3] 참여와 거버넌스	[이슈 3] 문화예술의 미래 대응

#### ■ 주제 및 이슈 선정의 특징

- 담론 중심의 이동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예술현장을 바라봤던 1회에 비해 2회는 문화 예술 전반의 현재성에 대한 진단과 대응을 주제로 진행됨
- 이슈 선정 관점의 변화 : ‘예술지원, 공정생태계, 거버넌스’라는 명확한 대상을 중심으로 이슈를 모은 1회에 비해 ‘도전과 변화, 현재성, 미래대응’이라는 시대적 양상이 2회의 이슈 선정에 중요한 기준이 됨

#### 2) 이슈별 세션 주제 및 키워드 분석

구분	키워드	중복된 키워드	서로 다른 키워드
제1회 대토론회 (2020)	기초예술, 보존, 창작, 변화, 협치, 소통, 기후위기, 지역, 청년, 기술, 패러다임, 성주류화, 성평등, 코로나19, 위계, 공정보상, 평가제도, 성폭력대응, 거버넌스, 문화분권	기초예술, 변화, 기후위기, 지역, 청년, 기술, 코로나19, 성폭력대응, 거버넌스, 문화분권, 성평등	보존, 창작, 협치, 소통, 패러다임, 성주류화, 위계, 공정보상, 평가제도
제2회 대토론회 (2021)	코로나19, 공공지원, 문화분권, 거버넌스, 지역, 청년주류화, 성폭력대응, 현재성, 기초예술, 변화, 현장소통구조, 재현윤리, 페미니즘, 블랙리스트, 기술융합, 기후위기, 예술인권리보장법, 성평등, 인권		공공지원, 현재성, 현장소통구조, 재현윤리, 페미니즘, 블랙리스트, 예술인권리보장법, 인권

#### ■ 키워드 특징 분석

- 공통적인 키워드 : 2회에 걸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키워드를 통해 예술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주제를 발견할 수 있다.
- 서로 다른 키워드 : 서로 다른 키워드 간에도 ‘공정생태계’와 ‘예술인 인권’ 등의 포괄적인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 위 키워드 분석을 통해, 2020-2021년 코로나19 시대의 예술현장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관점의 흐름을 느낄 수 있다.

### 3) 운영 방법에 대한 비교 분석

#### ■ 세션 운영 유형

발제·토론 방식	라운드 테이블	오픈 토크
-사회자(1인), 발제자(2인 이상), 토론자(최대 5인) 구성 -발제자와 지정토론자 순차 발표 및 토론 방식	-사회자(1인), 발제자(1인), 토론자(최대 5인) 구성 -발제주제에 대한 토론자 간 심도 있는 자유토론 방식 -공론화 목적 세션에 적합	-사회자(1인), 토론자(최대 7인) 구성 -주어진 주제에 대해 사회자의 재량으로 토론자 간 심도 있는 자유토론 방식

#### ■ 2020-2021 세션운영 유형 분석

구분	제1회 대토론회(2020)	제2회 대토론회(2021)
발제·토론	4회	11회
라운드테이블	4회	1회
오픈 토크	4회	없음

- 2020년 대토론회는 라운드테이블 4회/발제토론 4회/오픈 토크 4회로 운영유형이 다양하게 진행되었지만, 2021년에는 발제·토론 11회/라운드테이블 1회로 ‘발제·토론’유형의 진행이 지배적이었다.
- 이는 2020년에는 오프라인 공간에서 온라인 촬영을 진행했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이 가능했지만, 2021년 대토론회는 온라인 중심의 ‘줌 웨비나’로 진행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제2회 대토론회에서 다양한 유형의 토론이 진행이 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 중 하나이다.

### 4) 참여자에 대한 비교 분석

#### ■ 참여자 구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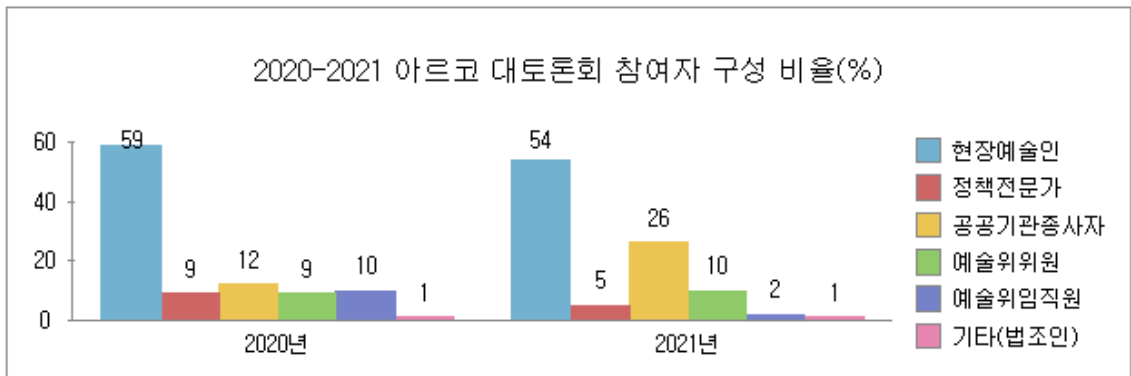
- 참여자는 각 세션에서의 역할을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예 : 소위원회 위원이지만 현장예술인의 자격으로 세션에 참여한 경우 현장예술인으로 구분)
- 참여자 그룹은 크게 현장예술인, 정책전문가, 공공기관 종사자, 예술위 위원(소위위원 포함), 그리고 예술위 직원으로 구분했다.
- 현장예술인의 범주에는 실연자 뿐 아니라, 예술현장과 직접 호흡하며 활동하는 기획, 연출, 비평가까지 폭넓게 포함하였다.
- 정책분야의 공공기관 종사자는, 예술분야의 공공기관 종사자와 구분하기 위해 공공기관 종사자로 분류했다.
- 음악, 문학, 연극 등 전문분야를 구분하면 더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겠으나, 본 분석에서는 큰 틀에서 참여자 구성만 살펴보았다.

■ 2020-2021 아르고 대토론회 참여자 구성 분석

○ 참여인원 및 구성원 분석 및 특징

구분	세션 수	총인원	세션평균	구성별 인원(명)					
				현장예술인	정책전문가	공공기관	예술위원회	예술위직원	기타
2020	9	69	7.6	41	6	8	6	7	1
2021	12	82	6.8	44	4	21	10	2	1

- 위 분석을 통해 2020년과 2021년 아르고 대토론회의 발제자 및 토론자에 대한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2020년과 2021년의 참여 인원은 13명(69→82) 증가 했지만, 세션 수가 증가(9→12)함으로서 세션 평균 참여자 수는 7명(7.6vs6.8) 내외로 비슷했다.
  - 하지만 현장 예술인의 비율(41vs44)이 비슷했던 것에 비해 공공기관 종사자의 참여 인원(8→21)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
  - 또한 예술위원회 위원(소위위원 포함)의 참여율은 전년도에 비해 약 50%가량 증가(6→10)하고, 예술위원회 직원의 참여율(7→2)은 그 이상 감소함으로서 2021년 대토론회에서 예술위 위원의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음을 알 수 있다.
- 또한 위 내용을 비율(%)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위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은 먼저, 전체 참여 인원이 늘어난 것에 비해 ‘현장 예술인’의 참여 비율은 약간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대신 눈에 띄게 늘어난 참여 그룹은 ‘공공 기관 종사자’였다. 대학교수와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대표되는 이 그룹은 전년도에 비해 두배 이상 참여가 늘었다. 이를 통해 2021년 아르고 대토론회에서는 공공기관 종사자의 의견이 필요한 주제가 많았다는 점을 추측해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현장 예술인에 대비되는 의견과 관점이 전년도에 비해 많아졌을 가능성 또한 예측할 수 있다. 다음으로 두드러진 특징은 전년도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10%→2%) 예술위원회 직원의 대토론회 참여율이다. 이것이 공공기관 종사자의 참여율이 높아진 이유와 연관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예술위에서 2021년도 대토론회를 임하는 방향성이 보다 현장에 중점을 두었을 가능성 또한 유추해 볼 수 있다. 정책전문가 그룹이 약 50% 정도 감소한 점도 눈여겨볼만 하다.

## 5) 총평

아르코 현장 대토론회는 현장소통소위원회를 비롯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 다양한 소위원회와 TF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현장의 담론을 예술인의 목소리를 통해 공유되고 정리되어, 예술위의 여러 사업과 정책 제안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실제로 대토론회가 열린 두 해 모두 현장예술인이 전체 참여 인원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볼 때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대토론회에서 발제와 토론을 통해 논의된 내용들이 실제 예술정책 또는 지원제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는지,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과는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또한, 위 분석에서는 다루지 못했지만 현장예술인의 참여 중 예술 장르별 참여율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대토론회는 장르 중심이 아닌 담론 중심으로 진행되었기에 각 장르, 특히 음악 분야로 예를 들면 지휘, 작곡을 비롯한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르의 예술인들이 참여를 해야만 부족한 부분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역의 균형, 세대의 균형 또한 맞춰야 한다. 현장소통소위원회 위원으로써 대토론회에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2021 지역간담회'를 통해 전국 각지의 현장에서 만난 예술인들과 나눈 담론들이 잘 다뤄지지 못한 점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소위 뿐 아니라 예술위 내 다양한 소위원회와 TF 간의 유기적인 교감과 공감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예술정책에 관심을 갖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더 많은 현장의 예술인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수록 다음 대토론회까지 다양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내년의 대토론회는 1회, 2회와는 차별화된 형식과 기획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코로나19의 종식을 바라보는 현 상황에 걸맞게 보다 적극적으로 현장과 대면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예를 들면 대토론회의 세션 장소를 서울의 한 곳이 아닌 지역의 다양한 곳에서 이뤄진다던지 하는 등의 균형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주요 담론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현장예술인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담아냄으로써, 더 많은 예술인과 교감하고 소통하는 예술위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p>2021~2022년 아르코 대토론회 포스터</p> 	<p>2020년 아르코 대토론회 현장</p> 
<p>2021년 아르코 대토론회 현장</p> 	<p>2020년 아르코 대토론회 QR코드(이미지)</p> 

## 6. 권역별 지역간담회

선아린(현장소통소위원회 위원)

### 가. 운영취지

- 예술현장과의 다양한 소통을 활성화하는 것은 현장소통소위원회가 가진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 간 코로나 19라는 환경은 소통의 장애요인으로 계속 작용하였다. 예술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공론화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현장의 여러 제안을 수렴할 수 있는 지속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온라인 정책제안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마련되지 못했던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현장소통소위원회 뿐만 아니라 다른 소위원회에서도 동일한 문제였지만, 특히 현장소통소위원회가 갖는 특성상 이런 역할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다.
- 2020년 하반기부터 현장소통소위원회는 특히 지역 예술가들이 창작활동을 하며 겪는 어려움에 대해 경청하고, 예술활동에 필요한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한국 지역문화지원협의회도 지역 예술가들과의 소통을 확장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 이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 당초 기획은 2021년 연초에 계획하고 있었으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대면 모임을 할 수 없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상당기간 지연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소위원회 내부적으로 비대면 회의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위원들은 '찾아가는 현장소통'이라는 당초의 취지를 포기하지 않으려 하였고, 결국 시기를 상황을 판단하여 5-6월 2개월 간 진행하기로 하였다.

### 나. 주요 내용

- 지역간담회는 9개 권역별로 실시하였고, 주로 지역에서 다양하게 활동하시는 예술가분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한 방향으로 계획되었다. 주제의 틀은 ①창작활동에서의 어려움, ②지원사업 및 심의제도 관련 개선 사항, ③지역문화 예술지원 거버넌스 체계, ④기타 제안 사항으로 하였다.
- 구체적으로 9개 권역(회의장소)는 대전·충남권(대전), 광주·전남권(광주), 강원권(강릉), 전북권(전주), 대구·경북권(안동), 세종·충북권(세종), 부산·울산·경남권(부산), 제주권(제주), 서울·경기·인천권(서울)에서 진행하였다. 지역별 개최일정과 행사일정에 참여해주신 소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다.

회차	권역명	일시	개최지	세부장소	참여위원
1차	대전·충남	5.3(월) 14:00	대전	예술의전당	신민준, 김대현, 이건명, 이일록, 홍태림
2차	광주·전남	5.7(금) 14:00	광주	아트스페이스	홍태림, 유은선, 이건명
3차	강원	5.12(수) 14:00	강릉	명주예술마당	김재훈, 김선영, 이건명, 홍태림
4차	전북	5.14(금) 14:00	전주	팔복예술공장	김근, 김대현, 송원, 이건명, 이일록
5차	대구·경북	5.21(금) 14:00	안동	경북도청 동력관	이일록, 김선영, 이건명, 박경주, 홍태림
6차	세종·충북	5.26(수) 14:00	세종	위드워크	이건명, 송원, 홍태림
7차	부산·울산·경남	6.2(수) 14:00	부산	한성1918 창작홀	이일록, 김선영, 이건명, 김재훈, 홍태림
8차	제주	6.4(금) 14:00	제주	아일랜드팩토리 풍류	홍태림, 유은선, 김재훈, 이건명
9차	서울·경기·인천	6.9(수) 14:00	서울	아르코미술관	김선영, 이사백, 김근, 김대현, 유은선, 이건명, 이일록, 신민준, 홍태림

\* 진하게 표시된 위원명은 당일 진행자임



- 회의시간과 운영상황을 감안하여 권역별 참여예술가는 20인 이내로 제한하였고,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하도록 기관 누리집 등을 활용해 홍보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함께 간담회 준비를 위해 사전 의견 접수를 받았다. 장르, 성비, 연령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특정 예술가들의 의견이 소외되지 않도록 구성하였으며 오프라인 개최 시 참여하는 예술인들에게 소정의 교통비를 제공하여 참여해주신 부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 참석자는 예술인들도 있었지만, 예술위원회 사무처, 지역재단, 시 관계자 등 기타 유관기관에서도 참여를 하여 어떤 논의가 이어지는지 경청하였다. 참석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회차	권역명	총인원	예술인(불참)	사무처	지역재단	기타
1차	대전·충남	41	15(2)	9	6	11
2차	광주·전남	38	16(4)	13	9	0
3차	강원	15	10(2)	5	0	0
4차	전북	29	12(9)	9	6	2
5차	대구·경북	24	6(5)	9	8	1
6차	세종·충북	27	11(3)	7	9	0
7차	부산·울산·경남	33	12(12)	14	7	0
8차	제주	23	8(6)	8	7	0
9차	서울·경기·인천	26	8(24)	16	0	2
계		256	98(67)	90	52	16

- 주요논의내용을 보면 심의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심의위원 풀 구성과 운영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다양성 확보 필요성이 대다수를 이루었고, 지역 내 이해충돌 문제, 전문성 확보, 지원사업 방식에 대해서는 장르 구분에 대해 포함되지 못하는 예술활동에 대한 요구, 서류작성을 벗어난 심의방식의 다양화, 보다 친절한 결과안내를 통한 수용도 제고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장기지원 전문예술인 지원강화, 예술가 생애주기를 고려한 사업개발, 사후지원, 집중지원, 프로젝트 그룹 지원, 지역격차 완화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공모지원 신청단계부터 교부정산, 사업수행, 결과환류에 이르기까지 행정절차상 예술현장 관점에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내용의 의견개진이 있었다. 그 외 지역의 예술활동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공간 활용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연계, 중앙 단위에서의 협치, 역할 정립, 공론장 마련을 통한 의견전달체계, 네트워킹 기회제공 등의 내용이 제안되었다.

## 다. 평가

- 권역별 지역간담회는 코로나19라는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현장소통소위원회가 예술인들에게 가장 적극적으로 다가가 접촉을 시도했던 활동이다. 2021년 5월~6월 2개월간, 9개 권역별 총 9번의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150명 가량의 예술인들을 직접 만났다.
- ①창작활동에서의 어려움, ②지원사업 및 심의제도 관련 개선 사항, ③지역문화 예술지원 거버넌스 체계, ④기타 제안 사항 등에 관한 주제로 자유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지역별 특색있는 이야기가 오가면서 ‘권역별’간담회라는 취지의 의도를 어느정도 성취할 수 있었다. 반면, 지역별로 참여 예술인의 참여도와 성향이 고르게 나타나지 않아서, 논의가 잘 되지 못한 지역과 중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로 인한 반복된 논의는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는 현소위가 주최하는 첫 번째 권역별 간담회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간담회에서는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예술인들과 자유롭게 토론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장으로 평가되는 만큼, 정기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과 현소위 3기 위원들의 임기 종료로 인해, 정기화의 틀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던 만큼, 지속적인 개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권역별 지역간담회 현장	2021년 권역별 지역간담회 결과자료집 QR코드
	

## 7. 아르코 공론장

김대현(현장소통소위원회 위원)

### 가. 아르코 공론장

#### 1) 운영취지

- 예술현장의 의제 수렴 및 발굴을 활성화하고 해당 의제가 일회성으로 소모되지 않으며 지속적체계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예술현장과 정책집단이 함께 참여하는 공론장 역할을 수행하는 정기간행물 간행의 필요성을 인식
-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2020년 12월에 열린 <아르코 대토론회>에서 도출된 의제들 중 특히 시급히 후속담론이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주제를 다루기 위해 3기 현장소통소위원회의 제안으로 <아르코공론장>을 임시적으로 운영

#### 2) 운영내용

- 발행기간 : 2021.08.~2021.12(총 5개월) 매월마다 2개의 아티클을 1호로 하여 총 5호 발행
- 편집위원회 : 김대현, 송원, 신민준, 이건명, 홍태림. (총 5인)
- 발행플랫폼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네이버 포스트 <예술의 향기><sup>1)</sup>
- 주제 및 필자 선정 방식 : 매 호마다 2개의 대주제(기초예술의 범위, 공정생태계 조성)내에서 매월 1회 정기편집회의를 통해 각각 하나씩의 소주제를 정해 호당 2인의 필자를 선정. (총 10인)
- 원고형식 : 단순 의견개진이나 사례 제보형이 아닌 해당이슈에 내포된 쟁점을 중심으로 담론을 형성하고 다각적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비평적 에세이를 유도.
- 대상독자 : 전문 현장예술인을 주 독자층으로 하며 예술담론 및 정책에 관심을 가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함.
- 원고분량 및 고료 : 편당 65매 (매당 10,000원, 초과 고료 책정 없음)
- 부기사항 : 1호 발행전 권두언의 형식을 통해 <아르코공론장>의 취지와 해당 주제를 선정한 이유를 간단히 밝히고, 5호 발행 후 원고를 수록한 필자들을 초청하여 좌담을 개최하여 게재된 글에서 중장기적으로 계획해야 할 담론 및 정책과제를 도출하여 사무처 및 이후 이어질 정기간행물에 환류.

#### 3) 평가

- '기초예술' 개념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접근과 예술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예술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해당 담론을 형성하기 위한 논의의 단초를 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예술인권리보장법'이나 '기초예술의 존재 이유' '청년 예술 정책'의 주요 내용을 다룬 글들이 전문적인 평문임에도 불구하고 조회수 1,000회를 훌쩍 넘었다는 점에서 현장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성공함

1) <https://m.post.naver.com/my/series/detail.naver?seriesNo=658500&memberNo=1921669&prevVolumeNo=32164638>

- 별도의 플랫폼이 아닌 <예술의 향기> 포스트를 이용함으로써 <아르코 공론장>이 의제하는 주된 독자층에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으며, 해당 의견들에 대한 피드백을 게재할 형식이 마땅치 않아 의견교환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개선해야 할 점임
- 임시 운영이다보니 교정·교열 및 원고편집, 필자관리 등에서 미숙한 점이 있어 혼선이 있었음. 향후 정기간행물 발간시 편집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나 용역계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4) 아르코 공론장 게재 현황(21. 7.~21.12)

연번	제목	필자	게재일	조회
1	아르코공론장 운영 안내문	김대현(편집위원장/현장소위위원)	2021.07.26	183
2	기초예술의 예술적 기초-사회예술에서 사회적 예술로의 도정	최진석(문학평론가/수유너머연구원)	2021.08.23	464
3	예술현장에서 공정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은 무엇일까?	이정희(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2021.08.23	182
4	전통예술에서의 기초예술 : 사회사적 의미분화와 문화적 가치	김희선(국민대교수/음악연구자)	2021.09.09	928
5	예술인의지위와권리의보장에관한 법률 제정 의미와 주요 내용	이성미(시인/예술인권리보장법TF)	2021.09.09	1,763
6	새로운 예술 생태계를 정초하는 가능성으로서의 청년예술 정책	신민준(예술대학생네트워크/현장소위위원)	2021.10.27	1,014
7	대학예술교육의 수상한 앞날	서동진(계원예대 교수/문화연구자)	2021.10.27	444
8	현장예술가들의 가상 공론장 기록-공정한 지역문화예술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언	이일록(로컬콘텐츠기획자/현장소위 위원)	2021.11.15	358
9	기초예술의 성찰들 - 음악의 기초가 되는 음악	이상욱/작곡가	2021.11.15	557
10	전통공연예술의 공정생태계-흐름과 진단	백소망(AMA-C동인/예술노동자)	2021.12.10	352
11	기초예술의 존재 이유와 예술 기반지원사업의 의의에 대하여	강선애/더하우스콘서트수석매니저	2021.12.14	1,018
12	<기초예술 범주와 기초예술 지원정책 기준의 변화>(좌담)	강선애, 김희선, 이상욱, 최진석, 김대현.	미정	집계중

\* 각 게시물의 조회수는 2022년 5월을 기준으로 함

## 8. 현장진단 - 무용계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할까?

이소영(현장소통소위원회 위원)

### 가. 무용 간담회 개최

#### 1) 간담회 개최 정보

- ▶ 개 요
- 일시 / 장소 : 2022.4.11.(월) 13:00~15:00 / 온라인 회의(zoom)
- 자문단(2인)
  - 윤○○(작가), 최○○(안무가)

### 나. 현장소통소위원회 위원 제언

2022년 4월 11일 ‘무용계 미투 이후 안전한 창작환경에 대한 담론 발굴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현장소통소위원회의 흥태림 위원장과 더불어 무용계에 몸담은 현장소통소위원회 위원 이소영과 앞으로 남은 2년의 임기 동안, 이 자리를 잘 기록하고 전달하기 위해 장인주 위원, 정책혁신부에 정창호 부장이 함께 했다. 그리고 무용 저널리스트이자 『4개의 키워드로 무용 현장을 읽는다: 여성, 신체, 공간, 폭력』 저자인 윤○○ 작가와 무용계 미투 운동에 다양한 방식으로 연대하며 자신만의 창작 방법론과 작업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최○○ 안무가를 자문위원으로 초대했다.

2015년에 류모 씨의 제자 상습 성추행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이후 2020년에 대법원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무용수 류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무용계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으며 안전한 창작환경으로 더 나아가기 위한 출발 지점이 어디인지 확인하는 자리가 되고자 했다.

**‘무용계 미투는 일체 공론화 과정이 없이 법정 사건이 취재로 드러난 이후 시작되었다.**

**미투 운동의 막차를 타고 공론장으로 들어갔다.’**

첫 번째로 미투 운동 이후 무용계에서는 어떤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지와 미투 운동 이후 현재 무용계가 당면한 상황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윤○○ 작가는 무용계의 미투 운동은 “미투 운동의 막차를 타고 공론장에 들어왔다.”라고 표현했다. 타 예술계에서는 피해자의 고발과 내부 각성이 먼저 시작되어 안에서 밖으로 향했다. 무용계는 류모 씨 법정 사건이 취재로 먼저 기사화된 이후 독립안무가, 무용기획자, 무용 평론가들을 주축으로 연대 활동이 시작되었다. 이를 두고 많은 매체에서는 ‘드디어 무용계에서 미투가 터졌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라는 식의 다소 선정적인 관점으로 재기사화 되기도 했다. 무용계는 각성과 공론의 과정 없이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움직임이 되었고, 여전히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연극계에서는 정기적으로 말하기 모임이 있었다. 이곳은 공연예술계에 불합리, 불공정, 배제와 차별, 괴롭힘, 폭력 등의 피해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자리로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목소리를 내는 연습’의 장이 되면서 수많은 제언을 통해 필요한 대책을 자발적

으로 마련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공공기관과 연계하고 다양한 방식의 연구모임들이 생겨났다. 한 발 앞서 나간 각계의 미투 운동의 파장과 더불어 무용계 연대 활동에 매체들의 관심이 쏠리면서 한 달에 한 번 공판이 열릴 정도로 빠른 속도로 결론이 도출되었다. 류모 씨가 징역 2년 선고를 받기까지 약 1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결론이 빠르게 도출된 것은 장점이지만, 그 사이 다양한 관점의 담론들이 깊이 나눠지기도 전에 마무리되었다는 아쉬움이 있다.

류모 씨 사건 이후 한양대 천모 강사 사건도 있었다. 이 사건도 질이 매우 나쁨에도 불구하고 앞선 사건에 힘을 모으다 보니 언론에 주목받지 못하고 가시화되지 못했지만 류모 씨 사건이 선례가 되어 법정에서 판결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 사건들이 선례로만 남아있어야 하는가? 이 선례 이후에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대학)무용계, 스승의 제안을 거절하는 대가는 무용계 퇴출이다.**

무용계 내부의 변화가 어려운 이유를 무용계의 구조적 문제라고 최○○ 안무가는 이야기했다. 윤○○ 작가 역시 ‘무용계’라는 단어 앞머리에는 ‘대학’이 있어야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무용계는 학계 중심의 권력 사슬로 이루어져 있다. 많은 무용과 대학의 교수들은 동 대학의 졸업생을 중심으로 한 무용단을 가지고 있다. 5, 6년 전만 해도 무용 관련 매체, 콩쿠르, 각종 협회, 기획, 제작 페스티벌의 대표와 심사단들이 각 학교의 교수들이었고 대학 무용단이 지원 대상이 되기도 했다. 교수들은 교육자이면서 심사위원, 단체의 대표라는 모든 권력의 최상위에 존재하게 된다. 이 모든 조건은 교수에게 밉보이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식이다. 그러므로 스승과 제자 간 위계질서가 다른 분야보다 훨씬 강력하다.

스승의 제안을 거절한다면 그 대가는 무용계 퇴출이다.

### **대학의 교육방식과 이어지는 창작, 안무의 과정.**

10대 전후로 시작되는 무용 전문교육의 내용은 ‘예술로의 무용’이 아닌 ‘입시 위주의 기술’로 채워져 있다. 소위 ‘○○ 대학의 스타일’을 배운다. 대학 교육도 학원이나 예중, 예고에서 배우던 방식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예술대학 무용학과’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색할 정도로 ‘무용수’ 교육만을 받게 된다. ‘예술로의 무용’은 창작의 과정, 새로운 시도, 실험적 접근과 동시대적 감각과 관점을 갖고 자신만의 세계관을 독립된 다양한 형태의 장에 펼쳐내는 것이다.

하지만 도제식으로 일관된 교육의 과정 안에서는 ‘예술가로서 사유의 힘’을 기를 수 없다.

앞서 말한 학계 중심의 인맥 구조, 도제식 교육은 곧바로 창작과 안무의 과정으로 이어진다. 대학 졸업 후 시작되는 창작 작업의 첫걸음도 많은 수가 학교 연계 무용단에서 시작된다.

최○○ 안무가는 동시대 신에서 안무가와 무용수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무자는 무용수에게 자기 세계를 소개하는 안내자이다. 무용수는 태스크를 수행하면서 느끼는 경험을 안무자와 끊임없이 소통한다. 이 두 개의 역할의 균형은 창작 과정에 발생하는 언어들이 맞물려 작품의 의도와 깊이를 만들어 낸다. 교육을 통한 사유의 힘은 주제 선정은 물론 연습의 과정 계획, 무용수와의 관계,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와 다르게 근대적 교육방식에서 이어진 안무는 ‘동작을 만들다’로 좁은 의미로 해석된다. 동작의 주인인 안무자는 무용수에게 동작을 준다. 그리고 무용수의 실력을 자신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저울질하는 힘을 갖게 된다. 작품이라는 세계는 안무자를 수장으로 그들 시선의 잣대 위에서 무용수의 몸은 재단되고 결정된다. 이 과정에 무용수가 말할 기회는 찾기 힘들다.

## 여성혐오(Misogyny)

‘Misogyny’는 좁은 의미로 여성에 대한 혐오를 뜻하고, 넓은 의미로는 멸시, 뿌리 깊은 편견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무용계는 대다수가 여성이며 아름다움을 기조로 하는 세계인데 여성혐오가 가능한가?

윤○○ 작가는 ‘혐오’라는 의미 안에 ‘멸시’와 ‘송배’가 공존하고 있고, 여성 송배가 왜 여성혐오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여성을 송배한다는 것은, 곧 그 인간이 가진 고유의 가치에 초점을 두기보다 ‘여성’으로서 그 대상을 찬양하고 좋아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건 곧 그런 ‘여성’에 대한 기준이 존재한다는 걸 의미하고 그 기준에 합치되지 않는 여성은 송배의 대상에서 벗어난다.

여성 송배는 ‘성별’과 관련된 기준을 세워 놓고 여성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로 주체성을 침해당하게 된다.

무대 위 선망과 동경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여성 무용수들은 끊임없이 아름답기 위해 노력한다. 무용수에게 “아름다워!”라는 말은 “춤을 잘 춘다.”, “무용수답다.”라는 말로 연결된다.

타고나야만 가능한 가느다란 팔과 다리, 긴 목, 작은 얼굴을 유지하기 위해 당연한 듯 고된 시간을 견뎌야 한다. 무용실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외모 평가가 시작된다. 관객을 홀려야 하는 아름다움은 그녀들을 가르치는 선생의 눈에서 먼저 시험을 당한다. 그 테스트는 공개적으로 자행되는 인신공격, 언어, 신체적 폭력을 참아내는 것과 함께 치러진다.

## 쓸모없는 몸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누구나 ‘무용가’라고 하면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몸의 태’가 있을 것이다. 대개는 여성의 몸이며 그 전형성에 못 미치는 무용수가 무대 위에 오르는 것을 상상하기 힘들 것이다. 그동안 볼 수 없었기에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2022년 5월 1일 어느 발레리나의 부고를 기사로 접했다. 마음 아파할 겨를도 없이 기사의 머리말에 생각이 멈추게 된다.

‘최단신을 극복하고 피나는 노력 끝에 주역이 되었다.’

발레를 하는 데 있어 최단신이 왜 피나게 노력해야 하는, 극복해야 하는 조건이었을까?

실제로 작은 키는 춤을 추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녀는 그저 춤을 잘 추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고 그것만으로 훌륭한 발레리나였다.

무대 위의 가느다랗고 긴 팔, 다리와 목, 작은 얼굴, 납작한 상체, 고운 피부는 나이가 들면 변한다. 무용수다운 신체를 타고났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위의 기준이라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주름마저 춤을 추기 위해서는 무대에 서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조건이 된다. 무용계에서 피나는 노력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한계에 마주한 몸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다. 어느 예술대학에서 학생들이 무용과 학생들을 향해 “선녀들이 지나간다.”라거나 “나비가 날아다닌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그 말은 선망이며 조롱이었다. 선녀 안에는 선남이 존재할 수 없고, 몸집이 큰 나비는 더 이상 나비일 수 없다. 춤을 추는 데 선녀일 필요가 있는가? 선녀가 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하는가?

윤○○ 작가는 안무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다고 했다.

어떤 무용수는 크게 다치고 재활을 받기 시작했다. 재활 상황에서 자기 몸의 상태를 깊이 들여다보며 다른 움직임의 방식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 상황은 고스란히 창작의 아이디어로 안무 작품에 이어졌다고 한다. 무용수의 상태를 그대로 안을 수 있는 작품을 만들 수는 없는가? 피해 상황이 고스란히 신체에 남아

있는 무용수가 복귀할 때 그의 상태를 돌보며 작업할 수 있는가?

### 창작의 시선이 바뀌어야 토양이 바뀐다.

윤○○ 작가는 현재의 지원금 정책은 주체적 창작환경을 만들 수 있는 존재들에게 맞춰져 있지 않다고 이야기했다. 생산에 최적화된 상태의 작업에 맞춰져 있다.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세 개의 문법으로 이해되는 안무방식을 수행해 낼 수 있는 몸만이 안무의 효율을 높이고 무대를 장악할 때만 무용 작품으로 인식되는 관점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배제와 차별이 따라온다. 새로운 방식의 무용 공연이 무용수답지 않은 다양한 몸의 움직임으로 펼쳐질 때 작품의 질이 낮다고 판단하는 고정관념에도 문제가 있다.

창작의 시선이 바뀌어야 한다. 새로운 법칙으로 구축한 새로운 세계 안에서 새로운 움직임을 발견하는 활동이 많아져야 한다.

최○○ 안무가는 대학 무용계에서 현장으로 빠져나온 독립 안무가들의 창작 지평이 넓어져야 무용계의 문제를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스스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안전한 창작환경을 만들 수 있는 독립안무가들이 예술과 창작의 관계를 만들어 나아간다면 폐쇄적인 대학 무용계와 다른 다양한 경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카르텔을 직시하지 않는 예술계

1997년 중앙대 남자 제자들을 성추행한 국모 전 교수는 법정 싸움 끝에 1년의 실형 선고를 받았다. 2019년 여성신문에 기고한 윤○○ 작가의 글에 따르면 국모 전 교수는 대학교수와 공공단체장이라는 직위는 잃었지만, 이후에도 국공립단체에서 제작하는 신작 의뢰를 받으며 창작 활동을 꾸준히 이어갔고 그가 이끄는 개인무용단은 각종 지원금사업에 선정되어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으며 공연 활동하고 있다. 2017년에는 한 협회를 통해 전통춤 이수자인 자신의 춤을 명작 무로 지정받기도 했다. 미디어오늘에서 보도한 류모 씨는 국모 전 교수로부터 전통춤 배우기도 했는데, 이는 무용계의 카르텔이 작동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기도 하다. 류모 씨를 상대로 한 법정 싸움이 어떤 결말을 짓게 되든 간에, 모두가 피해자를 자처하며 피해자 편에 설 용기를 내지 못한다면 류모 씨에게도 국모 전 교수와 같은 기회와 명예가 다시 주어질 것이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무용인들이 피해자의 곁에 섰을 때만이 무용계의 회복 가능성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류모 씨는 2020년 1월 2년의 실형 선고를 받았다. 벌써 2년의 세월이 흘렀다.

류모 씨 사건 이전에도 끊임없는 피해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무용계는 외면하기 바빴다.

지금은 '무용인 희망연대 오롯'을 중심으로 연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아르코의 지원을 받아 지속적인 연구와 조사를 이어오고 있으나 견고한 카르텔 앞에선 변화의 흐름에 속도를 붙이지 못하고 있다.

카르텔 안에 안주하며 방관과 침묵으로 일관된 무용가들이 스스로 피해자 프레임에서 벗어나 잠재적 가해자임을, 카르텔이 견재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위치에 있음을 자각하고 그 자리에서 더 이상 가해의 상황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그리고 피해자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으로 자신의 역할을 찾아 실천해야 할 것이다.

### 변화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대학 무용계에서 현장으로 빠져나온 독립 안무가들의 창작 지평을 넓히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 촘촘한 인맥관계의 구조에서 예술과 창작의 관계망으로 전환하기 위한 주축은 누구인가?
- 안전한 창작환경을 위해 어떤 지원제도가 필요할까?
- 대학 연계 무용단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의 춤 방식은 어떻게, 왜 유지되고 있는가?
- 무용수가 침묵을 깨고 자신의 목소리를 찾기 위해 어떤 자리가 필요한가?
- 안전한 무용창작 환경을 만들기 위해 무용교육자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 안무자, 무용수, 비평가, 매체, 공공기관의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 더 이상의 가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가해자의 복귀는 어떤 단계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 피해자가 본래의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 V. 총평

---

### 3기 현장소통소위원회 백서 편집팀

지난 2년의 시간동안 코로나-19는 문화예술 현장에 큰 타격을 주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각종 예술 행사의 취소가 이어졌고, 이에 따라서 예술인들은 창작활동과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예술현장의 어려움과 더불어 현장소통위원회의 활동에도 많은 제약이 있었다. 1달에 2회 진행되는 정기회의가 대거 온라인 회의로 전환되어 원활한 내부소통이 어려워졌고, 적극적 의제 발굴을 위한 예술 현장과의 직접 소통도 매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예술현장이 어려울 때일수록 현장소통소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막중할 수밖에 없기에 현장소통소위원회의 활동을 조금도 축소할 수 없었다.

3기 현장소통소위원회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총 45회의 회의를 열어 각종 정책제안에 대한 대응 외에도 예술현장의 주요 현안을 능동적으로 발굴하고 공론화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장소통소위원회는 2021년 5월부터 2개월 동안 전국 9개 권역에서 <지역간담회>를 개최하였고, 2020년 겨울부터 매년 열린 <아르코 현장 대토론회>에 적극 참여했다. 또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블로그를 통하여 <아르코 현장대토론회>에서 도출된 주요 의제들을 심화시키는 <아르코 공론장>을 총 5개월 동안 운영하기도 했다. 또한 <예술인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공청회>와 <무용계 미투 이후 안전한 창작 환경에 대한 담론 발굴을 위한 간담회>의 경우처럼 예술현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위원들의 주도로 이루어진 소통 및 제도개선 활동. 그리고 예술현장에서의 공론이 필요한 현안에 대해 현장소통소위원회 명의로 입장문을 6건 발표한 것도 주목해야 할 주요 활동이다.

입장문 발표와 관련해서는 소위원회와 예술위 사이에 유의미한 협치가 작동하여 특히 주목할 사례도 있었다. 그것은 바로 '2021년, 해결되지 않은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아르코 3기 현장소통소위원회 입장문'이다. 문체부와 예술위 간 자율운영 협약 체결과 국회의 낙하산식 지정예산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이 입장문은 1달 후에 7기 위원회가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성찰과 대응을 멈추지 않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서 예술위는 블랙리스트 피해자와 예술현장 관점에서 예술위 구성원과 예술현장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블랙리스트 사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약속 이후 예술위는 국회의 낙하산식 지정예산 관리체계를 수립했으며 문체부와 예술위 간 자율운영 보장 공동선언문 체결을 추진하여 2021년 3월에 결실을 맺었다.

이처럼 3기 현장소통소위원회는 코로나-19라는 장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현장소통소위원회보다 더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한계와 그에 따른 과제도 여전히 존재한다. 우선 예술현장의 주요 의제를 발굴하여 공론화하는 동시에 예술현장과 예술위를 더 촘촘하게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의 확보를 꼽아볼 수 있다. 여러 노력이 있긴 했으나 7기 위원회에서도 소위원회 예산은 증액되지 못했다. 이로 인하여 앞서 언급했던 다양한 성과들 대부분이 현장소통소위원회에 배정된 예산이 아니라 다른 부서의 협조를 통해 확보된 예산을 통해 추진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공모를 통해 현장소통소위원회에 참여한 민간위원들이 현장소통소위원회에서 공론화하고 싶은 의제들이 있음에도 이를 충분히 다뤄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없기도 했다. 따라서 현장소통소위원회가 제 역할을 꾸준히 해나가기 위해서는 소위원회예산 증액을 통해 충분한 예산을 배정할 필요가 있다. 가령 2021년에 처음 진행된 <지역간담회>는 현장소통소위원회의 핵심 사업이자 매년 반드시 진행될 필요가 있는 사업인데 정작 현장소통소위원회에 이를 추진할 예산이 없어서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의 협조를 얻어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꼽아볼 수 있겠다. 현장소통소위원회에서 다루는 의제의 범위와 대응 방식도 4기 현장소통소위원회에서도 첨예한 논의 대상이 될 것이다. 현장소통소위원회 회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안건은 현장소통소위원회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그룹을 통해 제시된 정책제안들에 대한 답변이다. 이 제안들은 월 2회 진행되는 회의만으로는 소화하기가 벅찰 정도로 복잡하고 논쟁적인 성격을 가진 경우가 많다. 또한 예술위와 관련이 있는 제안도 있으나 예술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제안도 많다. 후자의 경우 권한의 부재로 인하여 대응이 쉽지 않지만, 예술위가 예술현장의 동반자이며 예술현장을 대표하는 기관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현장소통소위원회가 아르코혁신 의제에서 예술현장의 창구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과 예술현장의 대변자로서 예술위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설치된 곳이라는 점에서 전자와 후자를 함께 아우르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3기 현장소통소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공감대를 예술위 내부에서 충분히 구축하지 못했다. 따라서 4기 현장소통소위원회에서는 현장소통소위원회의 의제 범위와 대응 방식에 대한 공감대를 내부에서부터 더 확산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앞서 언급한 현장소통소위원회 홈페이지의 기능 및 운영 상 구조적 한계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현장소통소위원회 홈페이지는 2018년도에 구축된 이후 현재까지 한 번도 홈페이지 개편이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장소통소위원회 운영이 지속되면서 도출된 홈페이지의 문제, 즉 정책제안에서의 실명 언급으로 인한 명예훼손, 정책제안자의 익명성 보장, 정책제안 처리 절차 등에 대한 문제가 개선되지 못했다. 이 부분은 별도의 예산을 가용하여 홈페이지 설계 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맺어서 개선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논의사항은 2022년 현장소통소위원회 워크숍 개최결과, 38, 41차 현장소통소위원회 개최 결과 등과, 2022년 3월 21일에 진행된 현장소통소위원회 홈페이지 개선을 위한 업무회의결과를 참고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짚을 부분은 장르, 지역, 세대, 성별 등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모를 통해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현장소통소위원회는 물론이고 다른 소위원회가 예술위 내에서 선택적인 자문기구에 불과할 뿐 예술위의 의사결정 과정과 맞물리지 못한다는 점을 꼽아보고 싶다. 이를 보완하고자 월간경영전략 문건을 매달 소위원회에 공유를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지 못했기에 실효성을 체감할 수 없었으며 문예진흥기금 예산 수립 과정에서도 현장소통소위원회를 비롯한 소위원회 단위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논의할 수 있는 구조도 수립하지 못했다. 따라서 차기 예술위와 현장소통소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지점들에 대해서도 논의와 보완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내용들이 차기 현장소통소위원회에서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안들이지만, 이 외에도 백서의 내용들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들이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백서뿐만 아니라 1기, 2기 현장소통소위원회의 백서를 면밀히 살펴본다면 예술현장에서 그리고 예술위 안에서 현장소통소위원회가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이정표들을 재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이정표들을 재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4기 현장소통소위원회가 이전보다 더 많은 결실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라며 8기 예술위는 4기 현장소통소위원회가 더 유의미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겠다.

## VI. 별첨자료

### 현장소통 홈페이지 정책제안 및 답변 현황(20. 3. ~ 22. 3.)

연번	제안제목	분야	제안일	답변일	소요 일수
1	코로나 19 관련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입장, 정책과 전략 문의	코로나	2020.03.25	2020.06.11	78
2	거리예술 분야 COVID-19 피해 실태 파악 및 정책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코로나	2020.03.30	2020.06.11	73
3	창작산실 뮤지컬 공연실황을 학교에서 아이들이 만나볼 수는 없을까요?	예술지원 (창작산실)	2020.05.21	2020.06.11	21
4	창작산실 지원사업에 기초예술 다양성 증진 분야를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술지원 (창작산실)	2020.06.17	2020.07.02	15
5	문학선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문학	2020.08.11	2020.11.04	85
6	가칭)문화예술지원센터 시군단위 설치 및 현장지원	예술지원	2020.08.28	2020.10.27	60
7	공연 행사 취소 관련 계약 미체결 시 해결 방안 문의	코로나 (공연)	2020.09.04	2020.11.27	84
8	시각예술 창작산실 사업에 대한 15가지의 제안 및 질문	예술지원 (창작산실)	2020.09.09	2020.12.09	91
9	다원예술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원예술	2020.10.26	2020.12.31	66
10	2021년 문예지발간지원 사업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합니다.	문학	2020.11.06	2020.11.30	24
11	신춘문예 당선소설집을 발간하고 고료를 지급하지 않는 한국소설가협회를 고발합니다.	문학	2021.01.09	2021.03.10	60
12	예술활동증명 예명 사용 제안	예술인복지	2021.01.25	2021.03.02	36

연번	제안제목	분야	제안일	답변일	소요 일수
13	2021년도 문학창작산실 문예지발간지원 사업 지원 대상 선정 결과에 대한 질의서·성명서	예 술 지 원 (창작산실) / 문학	2021.02.08	2021.03.29	49
14	아창제 제출자료 관련 건의합니다.	축제 행정간소	2021.02.15	2021.04.20	64
15	2021년 문예지 발간지원사업에 선정된 문예지의 선정을 취소해주시시오	문학	2021.03.02	2021.06.04	94
16	지원사업에서 음악 장르의 제한 및 정의에 대하여	음악	2021.03.05	2021.04.14	40
17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선정 기준에 대해	예술인복지	2021.03.05	2021.04.09	35
18	장수군 꿈꾸는예술터 사업시행자의 자격 여부를 판단할 근거와 공공사업 운영에 있어 개개인의 사리사욕을 견제할 대안 마련이 절실합니다. * 1차 답변(2021.07.19) 이후 2021년 12월 15일, 아르코 현장 대토론회 공론화 실시	꿈터사업 (아르떼)	2021.03.31	2021.07.19	110
19	자부담금 10% 규정의 부작용 및 개선안 - 현물 도입, 신청자 본인의 사례비 책정 비율	예술지원 예술정책	2021.03.31	2021.05.10	40
20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의 자부담금 의무 기준 관련 제안	예술지원 (자부담)	2021.03.31	2021.05.10	40
21	예술인의 안전한 노동환경, 권리와 지위 보장을 위한 공론의 장 개최를 제안드립니다.	예술인복지	2021.04.13	2021.06.21	69
22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지원사업 정산 개선 사항 건의	축제	2021.04.20	2021.12.01	225
23	이주민 예술가 비자 제도 개선과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이주민	2021.04.30	2021.09.23	146
24	전시소개에 처녀작	기타	2021.05.21	2021.06.27	37
25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지원 사업 심의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축제	2021.06.25	2021.08.04	40
26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체육" 이 같이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2021.07.03	2021.08.04	32
27	신진예술인 예술 창작 지원 사업 기준	예술지원 창작지원	2021.07.08	2021.08.17	40

연번	제안제목	분야	제안일	답변일	소요 일수
28	예술활동증명 중 예명 확인 절차에 대해서 여쭙볼게 있습니다	예술인복지	2021.07.23	2021.09.23	62
29	출연확인서 양식	예술인복지	2021.07.27	2021.09.23	58
30	동료평가제 · 블라인드 심의제도 폐지와 다원예술 지원 사업 정상화를 촉구한다!	다원예술	2021.08.03	2022.01.26	176
31	웹진 문예지에 대한 일반 독자의 생각입니다.	문학	2021.10.02	2022.01.26	116
32	문학집필공간 '부악문원' 운영의 문제 점	문학	2021.11.30	2022.02.04	66
33	코로나19로 지자체에서 일방적인 계약취소 통보를 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메뉴얼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2021.12.20	2022.02.18	60
34	연습공간 대관 서비스 비밀번호 변경기능 추가	기타	2022.01.03	2022.01.26	23
35	서울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춤인 구성인원 의문	기타 무용 공공기관	2022.01.11	2022.02.18	38
36	2022 문예지발간지원사업의 문제점과 시정 대책	문학	2022.01.28	2022.04.04	66
37	비밀번호 변경 메뉴가 보이지 않습니다.	기타	2022.03.15	2022.04.04	20
38	2022년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관련 문의드립니다.	공연	2022.03.16	2022.04.04	19

※ 1건의 정책제안 해결 시간 : 평균 65일 소요(64.7일)

## 예술흥행(E-6) 비자 관련 간담회

### 1.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021. 4. 27.(화) 15:00 ~ 17: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회의실
- 참석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박경주 위원, 미국국적 E-6-1 비자 소지 일\*\* \*\*, 법무부 체류관리과장 및 담당자

### 2. 논의 내용

- (법무부) 그간 예술인비자 정책은 E-6-2의 인신매매방지 위주로 추진된 바, 문화예술진흥 및 대중문화발전 등을 위한 미래지향적 접근이 필요
- 문화예술분야는 국민 일자리 대체가능성이 적은 분야이나, 한편으로는 외국인 지원에 대한 국민공감을 받기 힘든 분야이기도 함
- 기존 비자체계는 전통적 고용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고용관계에 부응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국민인 문화예술인의 활동도 어려운 상황에서, 예술인비지만 발급한다고 하여 생계유지가 가능할지 의문이 있음
- 이러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향후 정책추진에 앞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점이 3가지 있음

- ▶ 문화예술비자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방안
- ▶ 문화예술 분야 관련 심사기준과 세부지표, 심사주체
- ▶ 문화예술인 비자의 형태 : 문화예술활동 외 다른 분야 취업의 허용여부 관련

- (박경주 위원) 문화예술인으로서 독일에서 체류했던 경험과 국내 체류외국인 대상 극단\*을 운영하며 느낀 점을 공유하고자 함

\* 다문화 극단 사회적 기업 '샐러드' 운영 중

- 국내대학 문화예술분야 전공 유학생이 극단에 참여하는 경우도 많은데, 졸업시기가 다가오면 국내 체류가 불투명한 문제가 있음
- 한편 외국인 문화예술인도 공적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심사기회는 공정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올해 부터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대상에 외국인도 포함되도록 개선함
- ※ △수혜대상 체류자격(현재 F-2-4, F-5, F-6) 및 △지역 문화예술재단에서도 외국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예술흥행(E-6) 비자 관련 간담회
- E-6-1과 E-6-2는 활동범위나 자격요건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야 하며, E-6-1의 활동범위는 순수 문화예술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문화예술인 대상 프리랜서 비자를 신설할 경우, 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활동증명 관련 평가지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E-6-1의 활동범위를 확대하거나, 문화예술인 비자를 신설할 경우 문화예술 활동 외 영리활동을 허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됨

- E-6-1과 E-6-2를 함께 초청한 업체도 있는데, 피초청 외국인을 상담해보니 사업수익을 정산해주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음
  - E-6-1도 SNS 메시지 등을 통해 초청하는 등 제도남용으로 판단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한 업체정보를 제공하는 등 보완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한편 문화예술인으로서 E-6 비자를 받은 경우, 거주(F-2), 영주(F-5)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도 있음
  - E-7 비자로 활동할 수 있는 문화예술 분야를 확대하고, 국내대학 유학생이 졸업 후 E-7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좋겠음
- (일\*\* \*\*) 현행 E-6-1은 초청업체와의 계약관계가 있으면 외국인 개인의 문화예술분야 전문성 수준과 관계 없이 비자가 발급되는 것 같음
- 해외 학위나 문화예술분야 활동경력을 토대로 우수한 문화예술인이 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 현재는 특별한 전문성 없이 소속사에서 초청한 외국인이나, F계열(거주, 동반 등) 기존 체류자 위주로 활동하고 있어 외국 문화예술인에 대한 인식저하도 우려
  - 문화예술분야는 1인이 다양한 활동을 겸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자 신청 시 활동계획서에 직종을 특정해야하고, 단기비자는 어떤 프로젝트 때문에 입국하려고 하는지 기재해야 해서 활동범위가 매우 제한됨
  - 현재 장기비자 발급이 가능한 분야가 모든 문화예술분야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활동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 (예) 국내에서 영화제작(film making)을 하려는 경우, 관련 비자가 없어 단기비자(C계열)로 입국해 촬영하고 출국하는 수밖에 없음
  - 또한 초청업체가 계약위반수수료 과다청구 등 잘못을 할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어야 함

### 3. 향후 계획 관련

- (법무부) 금일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비자 발급기준 개선 - 다만 기타 직종 겸업까지 허용하는 것은 곤란
- ▶ E-6-1의 경우 소속사 없이 프리랜서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개선
- ▶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 활동이 가능하도록 활동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
- ▶ 국내대학에서 문화예술분야를 전공한 유학생 우대방안 마련

- 유학생의 경우, 유학산업과 인재유치는 별개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므로, 모든 유학생의 국내체류를 유도할 필요는 적다고 판단됨
- 현재 문화예술비자 관련 연구자료는 부족한 상황으로, 문화예술분야 체류외국인 실태조사 연구 등이 먼저 선행될 필요가 있음
  - ※ 다만 현재(4월말) 시점에서 정부부처의 연구예산 집행은 어려울 수 있음
- 향후 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3~27) 수립 시, 우수인재 범주에 '문화예술'인재를 포함하여 논의를 지속할 수 있도록 건의 예정임
- 특정분야별 외국인정책을 추진할 때는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관심과 지지가 중요한 바, 문화부와 논의할 필요도 있음

### 3기 현장소통소위원회 입장문

#### 1. [입장문] 2021년, 해결되지 않은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아르코 3기 현장소통 소위원회 입장문

2020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정권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위헌임을 선고했다. 이번 결정은 문화예술인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이 헌법상 허용될 수 없는 공권력의 행사임을 다시 한 번 명백히 확인한 것으로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현장소통소위원회는 블랙리스트 사건이 남긴 과제들이 2021년 현재에도 소멸되지 않고 있으며 블랙리스트 실행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를 비롯해 여전히 곳곳에 산적해 있음을 잊지 않고 있다.

먼저 국정의 총책임자로서 청와대는 아직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공식 인정과 사과, 재발방지 약속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입법을 통해 문화예술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수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국회 또한 동일하다. 행정과 입법을 대표하는 두 기관의 침묵은 블랙리스트사건 해결에 대해 산하기관들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필요하다.

또한 국회는 블랙리스트 사건을 기억하는 사회적 기억 사안을 경쟁의 대상으로 인식하여 원안대로 통과시키지 않았고, 블랙리스트 사건 재발방지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예술인권리보장법안 또한 방기함으로써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나아가 국회는 블랙리스트와 그 성격이 유사한 국회지정 사업, 이른바 낙하산식 쪽지예산을 블랙리스트 실행에 대한 오명을 벗기 위해 노력 중인 예술위에 내려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도 블랙리스트 사건 해결에 대한 의지가 결핍되어 있다.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사과에도 불구하고 문체부는 블랙리스트 사건을 언제든지 구조적으로 실행시킬 수 있는 산하 기관들과의 수직적 의사전달 구조를 변경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예술위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한 자율운영협약서 체결에 대한 논의가 표류되고 있는 것은 이에 대한 대표적인 방증이다. 또한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문체부 장관이 신년사에 블랙리스트 사건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철저한 반성을 해야 할 블랙리스트 실행 기관의 장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예술현장의 파트너를 자임하면서도 블랙리스트 실행 기관이라는 씻기 어려운 오명을 안고 있는 예술위도 여전히 이에 대한 반성과 실천이 부족한 상황이다. 예술위는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수립된 아르코혁신안에 대한 총체적인 이행과 보강을 꾸준히 이어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영상의 독립을 위한 국가예술위원회 전환과 문체부와의 자율운영협약서 체결을 장기간 방치하고 있다. 또한 예술위는 구조적인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초, 광역, 중앙을 가로지르는 예술현장과와의 협치구조를 만들기 위한 방향성과 로드맵을 만들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예술위 전체의 차원이 아니라 관성에 따라 소위원회 운영의 틀에 가두고 있다.

블랙리스트 사건이 내포하고 있는 엄중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일부 예술위 임직원들의 의식도 문제다. 최근 한 지면에서 인터뷰이로 참여한 예술위의 한 직원은 과거 문체부의 지시로 지원금을 인질 삼아 심의위원들과 예술인을 겁박한 대표적인 블랙리스트 실행자다. 물론 그것이 자발적이 아니라 강제적

부역이었고 부역에 대한 징계처분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블랙리스트에 대한 사법적 처리와 사회적 기억,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술지원정책의 홍보를 위한 외부활동은 신중함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인터뷰를 진행한 직원도, 인터뷰 기사를 기계적으로 공유한 직원도 블랙리스트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이는 예술위의 사과 표명에도 불구하고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성찰과 실천이 예술위 내부까지 충분히 체화되지 못함을 반증한다. 따라서 예술위는 2021년부터는 더 철저하게 블랙리스트에 부역했다는 사실을 반성하고 아르고혁신안을 총체적으로 예술현장과 함께 이행해 나가야 한다.

이에 3기 현장소통소위원회는 관련기관들에 대해 다음의 사안들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청와대와 국회는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공식 인정과 사과 그리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하나. 국회는 블랙리스트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사회적 기억 사업과 예술인권리보장법안을 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하나. 국회는 화이트리스트와 다를 바 없는 국회지정 사업(쪽지예산)을 무분별하게 예술위에 내려 보내는 것을 중단하라.

하나. 문체부는 산하 공공기관들과 지시가 아닌 협력이 바탕이 되는 의사결정구조를 마련하고 예술위와 정상화된 자율운영협약서를 조속히 체결하라.

하나. 예술위는 국가예술위원회 전환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고, 자율성의 근간이 되는 기초-광역-중앙을 아우르는 거버넌스 로드맵을 마련한 후 그 성과를 예술현장에 공유하라.

하나. 예술위는 블랙리스트에 부역했다는 사실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철저히 성찰하고 이를 예술위의 행정 전반에 반영하라.

하나. 예술위 위원회는 예술위와 관련된 현장소통소위의 요구사항들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이행 로드맵을 2021년 3월 이전에 공개하라. 또한 이행 로드맵에 따라서 진척된 사안을 연말에 예술현장에 공유하고 평가 받아야 한다.

현장소통소위원회는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고 혁신TF의 권고에 따라 설치되었다. 앞으로도 현장소통소위원회는 블랙리스트 사건이 완전히 해결될 그날까지 각 기관의 책임있는 이행을 지켜볼 것이다.

2021년 1월 8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기 현장소통소위원회 일동

## 2. [논평] 미술은행 응모자격은 공공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는가?

미술은행 응모자격은 공공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는가?

국립현대미술관의 미술은행은 미술작품의 구입과 대여를 통한 작가 지원, 미술시장 활성화, 국민의 문화향유권 향상을 목적으로 2005년에 설립되었다.

이처럼 나름의 목적성을 가진 미술은행이지만, 지금까지 특정 장르나 성별 및 나이에 따른 편중매입, 예산 축소, 인력부족, 소장품 대여 활용도 문제 등이 계속 불거졌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가 여전히 상존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2021년 미술은행 응모자격에 대한 미술인들의 비판까지 더해졌다. 그렇다면 왜 미술인들은 이번 미술은행 응모자격에 대하여 우려하는 것일까. 그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근래에 미술은행 응모자격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7~2019년 미술은행 응모자격은 개인전 5회 이상 개최 실적이 있는 작가(국적 관계없음)로 설정되었다. 그런데 2020년에는 미술은행 응모자격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이며, 공고일 전날 기준 7년 이내에 국·공·사립 미술관에서 개인전 또는 단체전을 1회 이상 개최한 실적이 있는 미술인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2021년의 미술은행 응모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국·공·사립 미술관(소속 레지던시) 주최, (사)한국화랑협회 소속 갤러리(대관전시 제외)에서 공고일 전날 기준 5년 이내 개인전 1회 이상 개최 실적이 있는 미술인으로 바뀌었다.

이처럼 2017~2019년 미술은행 응모자격은 작가의 전시가 열린 공간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 미술은행 공모의 범위는 국·공·사립미술관으로 한정되었고, 2021년에는 국·공·사립미술관이라는 기존 조건에 화랑협회 소속 화랑이라는 조건이 덧붙었다.

이러한 변화는 응모자격 기준을 한정하여 예술성이 충분한 작품을 더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이해하기도 어렵다. 또한 국·공·사립미술관과 상업화랑들의 이익단체인 화랑협회 외의 전시공간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을 배제할 여지가 높다는 점에서 공공성과 공정성의 문제도 있다.

후자의 경우와 관련하여 예를 두 가지 들어보자. 2019년 미술시장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화랑은 약 460곳으로 추산되는데, 이 중 화랑협회에 가입된 곳은 약 160곳이므로 현재의 미술은행 응모자격에 따르면 적어도 300곳의 화랑과 관련된 작가는 미술은행에 진입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상업성보다는 예술성, 실험성에 무게를 두고 활동하는 독립 전시공간들에서 주로 활동하는 작가들의 참여 가능성을 봉쇄한다는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앞서 언급했듯이 미술은행은 미술작품의 구입과 대여를 통한 작가 창작지원, 미술시장 활성화, 국민의 문화향유권 향상을 목적으로 삼는다. 그러나 근래의 미술은행 응모자격 변화는 미술은행의 설립 목적에 내재된 공공성을 무색하게 하며 공정성의 문제도 있다.

따라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현장소통소위원회는 미술은행을 운영하는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의 운영을 관장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번 미술은행 응모자격이 도출된 과정과 근거를 밝힌 후 미술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공성과 공정성이 보장된 개선안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

2021년 2월 25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현장소통소위원회 일동

### 3. [입장문] 마포구청은 현장 예술인의 목소리에 응답하길 바란다

지역 내 소규모 공연장은 예술인에게 지속적인 도전의 장이자 지역 주민에게 생생한 예술의 현장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문화 다양성을 증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또한 소규모 공연장은 인디음악으로 통칭되는 록, 포크 등의 특정 예술 장르뿐만 아니라 전통음악, 클래식, 연극, 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시민들과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해당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의 예술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예술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시민사회의 문화예술역량 증진을 위해 지역의 소규모 공연장과 그곳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을 지역사회와 공생하는 동등한 파트너로 대우해야 할 책무가 있다.

하지만 지난 2월 27일, '네스트나다'에서 예정된 공연이 마포구청 측에 의해 강제로 취소된 사건은 이러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한다. 해당 공연의 관계자는 사전에 직접 마포구청 위생과에 문의하여 공연 진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공연이 시작되기 30분 전에 이곳을 찾은 마포구청 관계자는 서울시의 방역 지침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로 공연을 강제로 중단시켰다. 공공기관이 자신의 답변에 대한 신뢰를 배반한 것도 문제이지만,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것은 이후의 발언에 있었다. “세종문화회관 같은 곳만 공연장이지,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된 곳에서 공연하는 건 칠순잔치.”라는 마포구청 관계자의 발언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된 예술 생태계와 예술인의 존재양식에 대해 일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이해 수준이 여전히 얼마나 저열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마포구는 2021년 3월 25일에 <마포구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방안>을 발표하며 지역 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상기한 바와 같이 지역 예술인들은 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홍대 관광 특구 지정 신청'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마포구 문화예술정책의 진정성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3월 24일, '공연음악 생존을 위한 연대모임'은 '공연음악 및 음악생태계 유지·복원을 위한 마포구청장 공개질의서'를 발표했다. 공개질의서에는 마포구청의 진심어린 사과와 문화예술의 중심지를 주창하는 마포구가 예술현장에 부합한 정책을 실현해나가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수많은 예술인들과 시민들이 연명을 했으며 이를 토대로 '공연음악 생존을 위한 연대모임'은 마포구청과의 대화를 계획했다.

그리고 연명이 진행 중이던 지난 3월 29일 월요일, '공연음악 생존을 위한 연대모임'과 별개로 '한국공연장협회'와 마포구청은 '라이브클럽'으로 불리는 관내 소규모 공연장에서의 공연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조건부 허용의 내용은 “관내 일반음식점에서 무대 및 공연 시설을 갖추고 공연업을 행하는 업소는 공연장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운영을 재개할 수 있다.”였다. 사태의 발단이 된 원인을 인식하고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한 것에 대해 '공연음악 생존을 위한 연대모임'은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마포구청은 아직 현장 예술인에게 정식으로 사과하지 않았고, '공연음악 생존을 위한 연대모임'은 이에 대해 여전히 구체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 '공연음악 생존을 위한 연대모임'의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난 2월 진행된 라이브클럽 단속조치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실 의향이 있는지 궁금하다.
2. 코로나19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문화예술인과 생태계 종사자들을 위해 마포구청에서 세우고 있는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다.

3. 홍대앞의 음악생태계를 지키고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예술인 지원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 상설적인 민-관 협력 테이블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

상기한 질의에 대한 응답은 마포구청과 현장예술인들 사이의 손상된 신뢰를 복원하고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황폐화된 음악생태계의 정상화를 비롯하여 이와 교차하는 인접 예술생태계들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척 중요하다.

그러므로 우리 현장소통소위원회는 '네스트나다' 공연 취소를 통보한 마포구청 관계자의 발언과 마포구청의 안일한 후속 조치로 인해 많은 예술인들이 받은 모멸감과 상처에 깊이 공감하며, 마포구청이 이에 대하여 정식으로 관련 예술인들에게 사과하는 것과 함께 '공연음악 생존을 위한 연대모임'의 질의에 답변할 것을 요청한다.

2021년 4월 7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현장소통소위원회 일동

#### 4. [입장문] 과천시의회 의원이 문화예술인에게 행한 모욕적 발언에 대한 한국문화 예술위원회 현장소통소위원회 입장문

코로나 19 사태의 장기화로 재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사람들은 다시 고립되었고, 적대와 혐오로 훼손되었던 시민들 사이의 유대 또한 쉽사리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회의감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예술의 회복력을 의미하는 이른바 ‘리질리아트(ResiliArt)’에 전세계가 주목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리질리아트는 회복력·탄력성을 의미하는 ‘리질리언스(Resilience)’와 예술(Art)’을 합친 조어로 예술인 및 창작자를 지원하기 위해 유네스코(UNESCO)가 제안한 운동이다. 독일 미디어문화부 장관의 언급처럼 장기간의 봉쇄조치로 인한 문화예술 활동의 정지 상태는 경제적 고통과 함께 시민들의 정서적 고통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독일연방정부는 ‘문화, 새로운 시작’이라는 프로젝트에 한화로 약 2조 7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예술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예술이 사회통합의 주요한 힘이라는 것을 선언함과 동시에 국가 및 지자체가 문화예술에 대한 배려의 의무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다른 선진국들도 마찬가지다. 미국 연방정부는 약 3,500억원의 기금을 마련하여 문화예술종사자에게 지급하였고, 주정부 또한 문화 예술활동 회복을 위해 민관 파트너십 정책인 ‘뉴욕 예술 부흥(New York Arts Revival)’ 등을 발표하였다. 스웨덴 또한 공연이 취소된 예술인 및 시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해 대략 1,500억을 지원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다른 주요 국가들도 이와 비슷한 문화예술부문 긴급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와 유사한 문화예술부문 긴급지원정책을 이어나가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이처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가리지 않고 문화예술을 통해 지역사회의 치유와 통합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다.

하지만 이러한 세계적 흐름과 달리 과천시의회에서 과천축제 예산 전액을 포함한 과천문화재단 주요 사업비를 삭감한 것은 무척 유감스러운 일이다. 올해 4월 과천시의회는 과천문화재단의 문화예술지원 사업 예산 총 14억 8천만원을 삭감했다. 여기에는 대한민국의 거리예술축제를 앞서 이끌어온 과천축제 예산 11억 5천만 원 뿐만 아니라 과천시민 생활문화 육성을 위한 과천시 생활문화센터 운영비 2억 2천만원, 지역 예술인 창작 문화활동 지원사업비 1억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이유로 들었지만 앞서의 사례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과천시의회 결정이 시대를 역행하는 것은 분명하다.

재난 상황에서 예산 조정이나 축제 진행 방식의 변화는 불가피하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과천시의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과천시민의 문화향유권을 보전하기 위한 시민사회와의 숙의의 과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비대면 프로그램이나 또는 예술인의 시선으로 지역의 문화생태계를 기록하는 아카이빙사업으로의 전환 논의 등이 그러하다. 하지만 과천시의회는 충분한 논의 없이 너무도 성급하게 25년간 지역 주민과 만들어진 축제의 예산뿐만 아닌 올해 과천시민이 향유해야 할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지원 전부를 일방적으로 삭감했다. 과천축제는 아시아 최초의 거리예술축제로서 전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축제이다. 그러므로 과천시의회 결정은 과천시민과 해당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일궈온 문화예술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한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해당 과정에서 과천시의회 한 의원이 보여준 문화예술에 대한 저열한 인식과 과천시의회 문화예술인에게 행한 폭력적이고 모욕적 발언이다. “이분들은 본인의 돈만 중요하고 본인 사업 진행하는 것만 중요합니다. 코로나가 터지든 말든 재난 사태이든 말든 (중략) 정말 이런 분들이 우리 과천시에서 지금 예술 사업을 하고 돈을 받는다는 것에 저는 분개합니다. 이런 분들은 앞으로 과천시와 관련해서 예산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사석에서 행한 발언이라 하더라도 놀라울 정도로 저열한 인식이 드러난, 녹취와 속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의회 공식 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것에 참담함을 감추기 어렵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할지 감도 오지 않는다.

문화예술활동을 급부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아가는 단순한 용역사업으로 인식하는 것도 문제지만, 예술의 회복력과 정서적 유대를 통해 코로나 19 사태로 지친 과천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노력을 함부로 재단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과천 시민들의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사람으로 치부하는 것은 문화예술인에 대한 저열한 인식을 넘어 동료 시민, 나아가 인간으로서 예의가 부족한 것과 다르지 않다. 이와 함께 해당 사안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 하여 동료 시민인 문화예술인들에 대해 앞으로도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엄포하는 것은 지난 정부에서 벌어졌던 블랙리스트 사태를 연상하게 한다. 블랙리스트 사건이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당 시의원의 발언은 권력이 문화예술계에 가한 폭력의 전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점에서 목과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9조 및 문화국가원리 및 문화예술진흥법 3조에 의해 국가와 지자체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만들고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하고 보호해야 한다. 하지만 과천시의회는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문화예술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그러나 이러한 저열한 인식과 달리 문화예술은 우리가 지켜야 할 인간적 가치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묻고 대안을 생성하는 작업이다. 과천시의 문화예술인들이 시도한 것도 인간의 가치,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사회의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상상을 보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다. 코로나 19 사태가 종식된 후,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또한 이처럼 문화예술을 통해 지금 까지 우리가 지나친 것에 대한 반성과 성찰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하여,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현장소통소위원회는 충분한 숙의과정 없이 행한 과천시의회와 과천문화재단 주요 사업비 예산 삭감에 대한 유감을 표하며, 과천 축제 및 시민들의 문화향유권을 보전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나아가 지역의 문화예술정책을 입안하고, 과천시민의 문화예술활동을 보호해야 할 시의원이 도리어 시의회에서 시민을 모욕하고 나아가 향후 지원 배제까지 언급하여 블랙리스트의 악몽을 재현하려 한 것에 대해 사과하기를 촉구한다.

일련의 과정이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대하여 우리는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현장소통위원회의 일이며, 동시에 우리 문화예술의 미래를 상상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2021년 7월 23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기 현장소통소위원회 일동

## 5. [성명서] 대한민국예술원 개혁논의에 대한 현장소통소위원회 성명서

최근 대한민국예술원(이하 예술원)에 대한 비판이 예술현장을 비롯해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진되고 있다. 예술원은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지원하고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을 행함으로써 예술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1954년 정부가 설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 아래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특수예우 기관이다.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예술원 회원의 자격은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30년 경력 이상의 예술인에 한정된다.

국가가 예술원 회원들을 예우하는 이유는 이른바 백석의 시에 담긴 ‘가난하고 높고 외롭고 쓸쓸한’ 예술의 길을 오랜 기간 걸어온 노고와 그간의 창작 활동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의 정서적 연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한 경의에 있을 것이다. 또한 헌법의 문화국가원리에 따라 국가가 예술의 가치를 옹호하고 지지한다는 하나의 징표로서 다음 세대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독려하는 역할도 예술원 회원들을 예우하는 이유일 것이다. 학술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인문·사회과학 부문, 자연과학 부문의 학자를 우대·지원하는 대한민국학술원의 설립목적도 이와 동일한 맥락이다.

문제는 예술원의 설립목적이 아닌 예술원의 운영방식이다. 작가들의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언론보도와 SNS 등을 통해 드러난 예술원의 운영방식은 그동안 예술원에 경의를 품어온 국민과 동료 예술인들에게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번에 제기된 예술원 운영의 비민주적 요소들과 활동에 대한 비판은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아진 공정의 가치 측면에서 엄중히 성찰되어야 한다. 이는 예술원의 정상화와 함께 예술원과 그 회원들의 영예와 권익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은 예술원법 5조에 규정되어 있는 예술원 회원의 입회에 관한 부분이다. 분야별 예술계의 총체적 합의 없이 기존 예술원 회원들만으로 신규 회원의 자격을 심의하고 선정하는 현재의 선출방식은 그 폐쇄성으로 인해 권력작용으로 내비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해서도 신뢰를 얻기 어려운 구조다. 유사한 맥락으로 예술원이 주관하고 회원들이 밀실에서 심의하는 대한민국예술원상도 현재의 폐쇄적 심의시스템 아래에서는 수상요건이 예술원 회원과의 사적인 관계로 결정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나아가 2019년 예술원법 6조의 개정으로 회원의 임기를 종신으로 하여 한번 회원이 되면 어떠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임기를 보장하도록 변경한 것 또한 다른 예술인들과 국민들에게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없음은 분명하다. 이는 예술원 회원들에게 매월 180만원씩 지급되는 연금과 더불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해 곤란에 처해있는 다음 세대의 예술인들이 박탈감을 가지게 한다. 또한 상당수의 예술원 회원들이 교수 등의 직위에서 은퇴하여 국가의 예산이 투입되는 별도의 연금 수급권을 가지고 있는 회원임을 감안한다면 회원의 생계곤란과 같은 별도의 제한 규정 없이 무조건적인 연금의 지급은 예산의 분배정의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합치하지 않는다.

예술원의 가치는 회원의 신분과 예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술인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경의와 회원들의 헌신에 있다. 경의는 스스로 쌓아 올린 권위의 성채에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소통과 헌신을 통해 만들어지는 가치다. 그럼에도 다음 세대의 예술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경의의 대상이 되어야 할 예술원 회원들은 권위와 영예에 함몰되어 스스로 예술원의 문을 걸어 잠갔다는 비판에 봉착했다. 이에 국민과 문화 예술 현장은 우려를 넘어 참담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하여, 현장 예술인의 의견을 예술정책에 반영하는 징검다리로서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현장소통위원회는

예술원을 둘러싸고 제기된 현장의 여러 비판과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우리 예술현장이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으며, 다음의 사항들을 예술원과 예술원의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기관에게 요청한다.

하나. 회원의 가입요건 및 예술원이 주관하는 제반 시상제도에 대해 현 회원들이 주도하는 폐쇄적 절차를 지양하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장치를 마련하라.

하나. 현행 종신으로 되어 있는 임기에 대한 규정을 중임제로 변경하되 예술원의 운영에 대한 비민주적 요소들을 개선하라.

하나. 회원의 예우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질병, 생계곤란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

하나. 다음 세대의 예술가들과 소통하는 정례적 장치를 마련하고 현장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강화하라.

그동안 우리 예술의 꽃대로서, 국민의 사랑과 예술인들의 존경을 받아온 예술원은 이제 “예술원이 왜 있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깊은 고민과 진정성 있는 답변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2021년 8월 17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기 현장소통소위원회 일동

## 6. [입장문] 2021년 다원예술 활동지원 사업 내 블라인드 방식 동료평가 심의제도 도입에 대한 현장소통소위원회 입장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는 2021년에 블랙리스트로 인해 폐지되었던 다원예술 지원 사업을 6년 만에 복원하면서 블라인드 동료평가 심의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2018년에 예술위가 주최한 ‘지원심 의제도 개선을 위한 예술현장 대토론회’에서 다수의 현장 예술인이 배제된 채 소수의 전문가가 심의하는 방식 외에 예술인 당사자가 중심이 되는 심의제도가 필요하다는 제안에 근간을 둔다.

예술위 3기 현장소통소위원회는 그동안 아르고 현장 대토론회와 9차례의 전국 지역간담회를 거치며 심의 제도의 개선과 변화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장소통소위원회는 예술위의 기존 심의제도에 대한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함을 절감했다. 그런데 이번에 예술위가 미흡하게 설계한 다원 예술 지원사업 내 블라인드 동료평가 심의제도는 사실상 지원자 간 상호평가 방식이었으며 지원 이후에 상호평가가 강요된 예술가들은 저작권 침해의 우려와 익명에 가려진 일부 혐오·차별표현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예술위는 심의과정이 논란이 된 이후에도 일부 오류가 있는 시각화된 설문자료를 발표하고 현장예술가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잘못도 저질렀다.

본 심의방식의 도입 배경은 블랙리스트의 악례와 같이 특정 세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심의 구조를 현장 예술인 중심의 구조로 전환하고자 했던 예술위의 고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다원 예술은 실험성과 다양성을 통해 동시대적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펼쳐왔기에, 일부 전문가의 정량적인 견해에 의존하는 심의가 아닌 창작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이 주도하는 심의를 도입하고자 했다는 예술위의 취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6년 만에 부활하는 이번 사업은 다원예술 생태계에 매우 소중한 사업이었다. 그만큼 예술위는 제도 도입 이전에 예술 현장의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했다. 그리고 이를 수렴하여 새로운 심의 구조가 해당 예술 생태계에 적합할지, 해당 심의제도가 어떠한 문제도 없을지 더욱 고심하여 제도를 설계 하고 도입했어야만 했다. 미비한 소통과 부족한 준비, 즉 성급한 사업의 설계 및 실행으로 변화를 요구 하는 목소리와 동력은 이번 사태로 급격히 저하될 것이 자명하며, 이 뼈아픈 사태의 책임은 예술위에 있다.

최근 예술위가 발표한 ‘2021년 다원예술 활동지원 사업 내 블라인드 방식 동료평가 심의제도 도입에 대한 사과 및 후속 조치 안내문’에 적시된 바와 같이 예술위는 깊이 반성하고 후속 조치도 철저히 이행 하기 바란다. 현장소통소위원회는 앞선 사과문에 언급된 후속 조치가 잘 이행되는지 그리고 예술위의 다원예술지원 사업이 다원예술 생태계와 긴밀히 맞물리며 정착하는지, 다시 말해 2021년도 다원예술 지원 사업에 적용된 심의제도가 낳은 사태의 향후를 엄중히 바라볼 것이다.

2022년 1월 26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기 현장소통소위원회 일동

## 7. [입장문] 공정하고 안전한 예술대학을 위한 성찰과 실천이 필요하다

### - J대학교 교수 비위 고발 접수 건에 붙이는 입장문

최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현장소통소위원회는 정책제안 플랫폼을 통해 J대학교 예술대 교수들의 비위 혐의들을 접수받았다. 현재 이 건은 광주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내사를 거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교수 등 2명을 입건한 상황이기도 하다. 그 결과를 기다린 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연관된 일부 사안들에 대해서도 대응이 이어져야 할 상황이다. J대학교 예술대 교수들의 혐의들 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연관된 사안은 현재 두 가지로 파악된다. 하나는 코로나-19 대책 사업으로 2021년에 진행된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위탁한 사업이며 주관처를 맡은 공연분야 5개 협회에 예산이 재교부된 후 협회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이 사업에 선정된 이들에게는 월 180만 원이 5개월 동안 인건비로 지급되었다. 현장소통소위원회 정책제안 플랫폼에 제시된 내용에 따르면 J대학교 예술대 A교수는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에게 매달 인건비의 일정 부분을페이백(PayBack)하도록 한 혐의가 있는 상황이다. 다른 하나는 J대학교 예술대 B교수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B교수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의위원 후보단에 포함되어 있는 문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우선 B교수의 심의위원 후보 자격을 정지하는 조치를 했다. 이처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J대학교 예술대 교수들의 비위 혐의와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대응을 하면서 경찰의 수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장소통소위원회는 이러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차원의 대응과는 별개로 예술대 교수들의 위계적 폭력과 각종 비리 문제가 문화예술계에서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 문제라는 점을 다시 환기하고자 이렇게 별도의 입장문을 공유하고자 한다.

### 예술대학은 여전히 안전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다

2016년 예술계 내 성폭력 고발, 2018년 미투(MeToo) 운동 이후 많은 대학의 교수들이 성희롱·성폭력으로 고발되었다. 2019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지적에 따르면 가장 많은 폭력으로 고발되었던 계열이 5계열 중 예체능 계열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2021년에는 또 다른 예술대학 교수의 성희롱 문제가 발생하여 국회 교육위 및 문화체육관광위 국정감사 건으로 제기되었으며 해당 교수는 혐의가 인정되어 학교에서 파면에 처하기도 하였다. 사실 예술대학의 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2018년 미투 운동 이후, D여대 문예창작학과 H교수, L여대 무용과 A강사, S여대 현대실용음악학과 A교수, S대 음대의 B교수, C교수, H대 시각디자인과의 A교수 등 매년 예술대학의 교수들이 고발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 때문에 '대학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대학의 관심 및 예산이 부족하여 다수의 센터 직원이 신분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이며 조사권도 없는 등 실효성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예술대학의 위계 폭력 문제는 이러한 인권센터의 실효성 문제에 더해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예술대학을 근간으로 재생산되는 문화예술계의 권력구조다. 교육계와 문화예술계는 큰 틀에서 각 법규나 생태계 상 구분되어 있지만, 이번에 광주경찰청이 입건한 J대학교 예술대학 교수 역시 지역의 다수 문화기관의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었던 것과 같이 예술대 교수들은 각종 문화예술 의사결정 기구에 참여하며 대학 내에서 그치지 않는 권력을 형성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때문에 문화예술계에서는 대학에서 교수가 징계를 받을지라도 몇 년 후 피해자에 대한 사과조치 없이 문화예술계 현장으로 복귀하여 기존의 권력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교수의 비위를 고발한 학생들은 점점 고립되다가 문화예술계를 떠나기도 한다.

우리는 예술대학에서 벌어지는 위계에 의한 폭력이나 교원채용 비리 문제 등을 문화예술계 차원의 문제로서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왜냐하면 예술을 가르치는 교육자의 이름으로 학생

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이나 공정성이 결여된 대학 내 행정이 결과적으로 용인되는 가운데 문화예술계의 자성과 성찰까지 사라진다면 예술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들어 준다면 예술의 길에 폭력과 각종 비리가 도사리고 있다면 창작에 대한 고담준론(高談峻論)도 의미를 가질 수 있겠는가.

### **예술대학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해나가자**

예술대학은 문화예술의 미래가 시작되는 중요한 장소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근절하기 위한 실천을 여전히 충분히 이어가지 못했다. 또한 예술대학 내의 위계 폭력이나 각종 비리 문제는 문화예술 현장은 물론이고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사이에서도 일종의 사각지대로 취급되어 이에 따른 피해자들의 양산과 고립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J대학교 예술대학 교수들의 비위 혐의와 관련한 수사 결과에 따른 인력 지원사업의 지원금 회수, 심의위원 후보 해촉과 같은 대처를 고려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예술대학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위계에 의한 폭력과 각종 비리 문제를 정부와 문화예술계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풀어나가기 위한 공론장을 현장소통소위원회와의 연계를 통해 이어갈 필요가 있다. 현장소통소위원회는 이러한 대응과 공론화가 예술대학 문제를 특정 개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차원에서 해결해나가야 할 모두의 문제로 거듭나기 위한 하나의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

2022년 7월 21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기 현장소통소위원회 일동